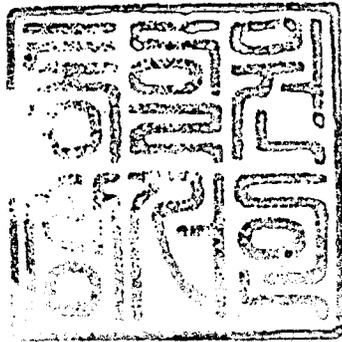


韓半島 内外環境斗 韓・蘇關係



1990

統 一 院

冊을 내면서

- 本 冊子는 統一院 政策調查研究事業의 一環으로 推進된 特殊課題 研究結果 報告書입니다.
 - 本 研究는 韓·蘇關係 증진에 따른 韓·美軍事關係의 再評價와 韓半島 平和保障을 위한 우리의 課題를 제시하고 바람직한 對蘇政策과 對東北亞經濟交流政策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判斷됩니다.
 - 따라서 同 冊子가 周邊情勢 및 統一政策研究의 참고자료로 적극 活用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 아울러 여기에 收錄된 內容은 반드시 當院의 見解와 일치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 ※ 本 內容은 漢陽大 및 蘇聯極東研究所 主催 韓·蘇 學術會議 (90. 4. 16~17, 서울)에서 既 發表되었음.

1990. 12

調 查 研 究 室

總 目 次

- I. 韓國의 國內政治와 對蘇政策 3
柳 世 熙 (漢陽大)
- II. 韓·美 軍事關係와 韓·蘇關係 35
車 榮 九 (韓國國防研究院)
- III. 새로운 韓·蘇關係 發展에 대한 美·日의 視角 ... 69
文 首 彥 (崇實大)
- IV. 東北亞 經濟圈과 多者間 經濟協力 93
安 錫 教 (漢陽大)

韓國의 國內政治와 對蘇政策

柳 世 熙
(漢 陽 大)

目 次

I. 北方政策, 韓蘇關係의 政治的 意味와 役割	7
II. 주요 政黨의 對蘇認識과 對蘇政策	11
III. 주요 社會勢力의 對蘇認識 및 韓蘇關係 發展에 對한 視覺	23
IV. 結 論	33

I. 北方政策, 韓蘇關係의 政治的 意味와 役割

한 國家의 대외정책은 대내적인 狀況과 외부환경의 변화와 密接한 關係를 맺으면서 결정된다.

최근 급격하게 진전되고 있는 한·소관계 역시 이러한 기본 맥락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한·소관계의 획기적인 발전은 1973년의 '6.23선언'까지 거슬러 올라 갈 수 있는 韓國政府의 북방정책 추진과 1985년 3월 고르바초프 서기장 취임이후 소련의 전반적인 대내외적 정책변화의 자연스러운 '接合'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앞으로의 한·소관계 또한 雙方의 국내상황 變化에 민감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식수교를 눈앞에 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한·소관계 혹은 韓國의 대소정책이 韓國의 국내정치상황과 어떠한 상관성을 가지면서 발전해 왔는가를 조명해보는 일은 매우 의미있는 작업으로 판단된다. 이는 그 동안의 한·소관계 발전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한·소관계 발전을 위해 양국이 극복해야 할 부분까지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韓國의 북방정책은 70년대초의 미·중관계개선 등 급변하는 주변 국제정세에 能動的으로 대응하고 북한과의 排他的인 우호관계를 맺고있는 중국, 소련 중심의 사회주의권 國家들과 관계를 개선하여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도모하는 한편 南北韓의 평화적 통일에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었다. 북방정책의 이러한 기본취지는 시기에 따라 다소의 기복을 보였지만 최근까지도 커다란 변화없이 유지되었다. 다만 韓國의 북방정책의 內容에 있어 커다란 변화가 있다면 최근에 와서 북방정책의 경제적 비중이 매우 커졌다는 사실이다. 즉 韓國經濟의 지속적 발전에 있어 수출 및 대외경제

협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데 비해서 서방국가와의 교역마찰은 韓國으로 하여금 사회주의 國家들을 새로운 경제협력의 파트너로 만들지 않을 수 없도록 한다는 점이다.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韓國의 민주화에 必要한 정치적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감안할때 韓國의 북방정책에 있어 경제적 의도가 커지게 될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국교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교역량이 늘어 中國이 韓國의 다섯번째로 중요한 교역 상대국이 된 사실 때문에 일반 여론은 蘇聯과의 관계개선도 韓國의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한 여론조사는 韓國國民들이 韓·蘇關係 개선을 대체로 肯定的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¹⁾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비록 소수이기는 하나 韓·蘇關係 개선을 비판적이거나 의구심을 가지고 보는 관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들 의견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설문 1) 韓國政府와 소련정부간에 국교수립을 위한 協商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蘇聯과의 국교수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바람직하다	72.3 %
(2) 바람직하지 못하다	8.0 %
(3) 잘 모르겠다	19.1 %
(4) 무응답	0.6 %

1) 이 輿論調査는 中央日報社가 1990년 3월 26,27일 이틀동안 全國電話保有家庭 거주 만 20세 이상 男女 1,000명을 추출하여 전화로 인터뷰한 것이다. 年齡分布는 20대 266명, 30대 304명, 40대 200명, 50대 이상 233명이다.

첫째, 지금까지 政府에 의해 주도되어온 북방정책은 韓國內의 民主化, 自主化에 대한 요구를 희석시키고 사회전반에서 표출되고 있는 갈등을 외부로 돌리려는 戰略的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6 공화국의 출범과 정치민주화의 진전, 특히 최근 사회주의권 國家들과의 관계 개선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과거에 비해 그 說得力이 많이 약화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적해야 할 새로운 문제는 각 정파들이 북방정책 추진 특히 蘇聯, 中國과의 관계 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놓고 각축전 양상을 보였고 이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대두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각 政派들이 북방정책 추진상의 획기적인 성과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강화를 밀접하게 연결시키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향은 蘇聯과의 접촉통로를 다양화하는 일반국민의 蘇聯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켰다는 점에서는 肯定的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이러한 양상이 심화될 경우 각 정파들이 韓·蘇關係를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강화 수단으로 이용하려한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많다.

둘째, 주로 在野 진보세력 및 학생들로부터의 비판인데 이들의 주장은 韓國의 북방정책은 사회주의국가와의 관계개선으로 北韓을 포위하여 北韓을 곤경에 빠뜨림으로써 오히려 통일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韓國의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이 北韓의 체제변화와 개방을 유도함으로써 통일을 오히려 앞당길 수 있다는 역비판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여론조사의 설문이 보여주듯이 韓·蘇關係改善이 南北韓關係改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주목할 必要가 있다.

설문 2) 蘇聯과 국교가 樹立되면 남북한관계는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보십니까?

- | | |
|--------------------------|--------|
| (1) 지금보다 개선될 것이다 | 52.7 % |
| (2)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 27.3 % |
| (3) 지금보다 더 악화될 것이다 | 6.7 % |
| (4) 잘 모르겠다 | 13.3 % |

셋째, 韓國과 蘇聯의 급격한 관계개선이 서방국가들과의 기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인데 이는 蘇聯과의 관계개선에 보다 신중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韓國政府가 추진해온 북방정책은 括目할 만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로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와 같은 비판은 韓國內의 각 정파, 주요 사회세력들에 따라 강조점에 있어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정치적인 쟁점으로 부각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II. 주요 政黨의 對蘇認識과 對蘇政策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韓國의 북방정책은 공식적으로 1973년 '6.29 선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국내정당들이, 특히 야당의 경우 독자적인 대사회주의국가 정당외교노선을 정립하거나 政策으로 실현시킨 예는 최근에서야 찾아 볼 수 있다. 따라서 國內政治的 민주화가 착수되기 이전인 1987년 말까지는 정당의 독자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북방정책이란 있지 않았고, 오직 정부차원에서의 북방정책만 존재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政府의 외교정책을 여당의 대외정책으로 간주할 수도 있겠지만, 一人中心으로 중앙집권화된 과거 한국정치사에서 의 경우 그것의 독자성은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적성국가와의 접촉을 일체 許容하지 않는 실정법하에서 야당이 사회주의국가와의 접촉내지는 정책노선을 樹立한다는 것은 상당한 不利益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988년 제 24회 하계올림픽의 개최를 전후해서 사회주의국가들과의 공식적 교류가 活性化 되었음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그 이후 政府의 북방정책이 본격화됨에 따라 비로소 각 정당들은 사회주의국가와의 접근을 조심스레 시작하였다. 따라서 집권당은 물론이고 야당들의 북방정책, 특히 대소인식과 그에 따른 대소정책을 규명한다는 것은 아직은 시기적으로 이른편이며 또 용이한 일도 아니다. 더우기 현재까지는 당지도자를 包含한 核心黨職者들만에게 機密이 유지되는 閉鎖的인 구조하에서 주요 당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는 것이 각정당의 내부사정임을 감안할 때, 그것은 이해할만한 일일 수도 있다.

이 장에서는 각 정당의 공식·비공식문건류 그리고 弘報資料 및 인터뷰를 통해 각 당의 대소정책을 재구성하는 한편, 때로는 論理的 추론 및 관

측을 원용했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아울러 본 장에서는 시기적으로 3黨合黨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합당 이전의 주요 정당인 民正黨·平民黨·民主黨 그리고 共和黨의 對蘇정책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살펴보고 이어서 합당후 민자당과 평민당 그리고 곧 창당될 것으로 알려진 진보적인 정당의 對蘇시각과 政策을 조명할 것이다. 아울러 對蘇정책이 정당이라는 조직을 통해 國內政治로 끊임없이 환류되며, 그것이 다시 對蘇政策樹立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과정을 기본틀로 삼아 각 정당의 對蘇정책을 규명해 나가겠다.

우선 합당이전의 민정당, 평민당, 민주당 그리고 공화당의 對蘇인식 및 對蘇정책을 대비시켜 보는 경우 뚜렷한 政策的 차이는 없었다고 보는 것이 필자가 각 정당의 관련 자료를 分析한 結論이다. 물론 세세한 문제를 검토할 경우 약간의 구별되는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각당 공히 1) 蘇聯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美國의 이해와 협조가 必要하다고 전제한 점, 2) 對蘇정책과 대북한정책을 명백하게 분리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문제’로 인식하는 점, 3) 對蘇정책에서의 주도권 장악을 國內政治의 연장선에서 파악, 입지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한 점 등 공통점을 볼 때 각 정당의 정책간의 차이점은 부차적인 것에 머물고 만다.

우선 민정당의 경우 북방정책의 기초는 “國民의 活動領域을 온 世界로 넓히고 우리의 자주외교를 신장하여 國家利益과 민족의 자존을 키워나가기 위한 것”, “우리와 사회주의국가간의 관계는 理念과 체제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利益과 번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진전되어 갈 것”, “우리가 당장 北韓의 태도를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그들의 우방을 통해 北韓이 도발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北韓을 개방사회로 이끌어

내도록 한 것”²⁾ 등으로 압축 요약할 수 있을 듯 싶다. 즉 민정당의 北方政策에서는 첫째, 북방정책의 目標은 韓國의 외교역량강화 또는 대외적 영향력 증대이며, 둘째 북방정책의 기축을 정치부문보다는 경제부문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셋째, 北韓에 대한 中·蘇를 통한 간접압력으로 개방시기를 앞당기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민정당의 북방정책의 特徵을 위의 3가지에 한정한다는 것에 반론이 제기될 수는 있다.

한편 민정당의 蘇聯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신중론 내지 對蘇警戒論에 토대를 두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즉 蘇聯은 체제안보와 國益次元에서 지난 20여 년간 극동지역의 軍事力을 꾸준히 증강하고 北韓과의 밀착을 통해 韓·美·日의 協力體制에 對應, 이 지역에서 美國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데 집착해 왔으며 亞·太地域 國家에 대해 집단 安保會議 개최, 비핵지대화, 韓國을 包含한 地域經濟 협력추진 등 적극적인 유화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蘇聯의 일방적인 영향력 증대와 이로 인한 美國勢力의 급격한 퇴조는 한반도문제를 오히려 複雜하게 만들 수도 있으며, 크라스노야르스크연설, 세바드나제 외상의 UN연설 모두가 한반도에서 미국을 거세하겠다는 기본전략에 脈이 닿아 있다고 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관계국 국제회담제이나 國際關係에서의 脫이데올로기 표명 등은 보다 전향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시각은 國內專門家 가운데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소접근 신중론 내지는 경계론과 軌를 같이 하는 바, 급작스런 개방을 하는 경우 첩보활동이 자유로워져 國家安全이 개방상태가 될 것이라든가, 또는 蘇聯과 北韓과는 역사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뗄 수 없는 관

2) 대통령 라디오국정방송, 1989.7.3 (민정당 기획조정실 “뉴스배경자료”, 1989.7.4).

계라든가 하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한 민정당의 북방정책은 1989년 후반기 동구권의變化에 대한 黨內 討議에서 엿보인다. “동구의 변화와 北韓의 變化可能性을 동시, 동일선상에서 보는 경향은 지양되어야 한다. 동구사태를 서구의 文化, 社會, 經濟的인 구심력의 우위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볼 때 한반도의 경우 엄청난 지정학적 구심력을 갖고 있는 北韓에 비해 南韓의 구심력은 미약하다. 美·日 태평양권결속 등 南韓의 구심력 강화 및 經濟·社會·文化的 구심력 보강이 절실하다. 또한 蘇聯의 핵철폐제안 등에 신중해야 한다. 東獨事態의 또 다른 측면인 피플파워 민족주의는 국내사정과 관련하여 볼 때 재야 및 운동권에 재잇슈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즉 ‘판문점으로 가자’라고 들고 나올 것을 예상해야 한다.”³⁾ 위와 같은 인식론적 토대를 지닌 민정당의 북방정책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5共和國 이래의 취약한 정통성 및 저조한 지지율을 보강하고 국내현안문제에 대한 國民的 關心을 대외문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政權安保的 側面이 다분하며, 사회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공고히 해온 한국경제의 새로운 시장개척을 요구하는 자본확대는 論理라는 점에서 북방정책을 추진하게 된 동기를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각 정당의 추진 배경을 간략히 살펴 볼 필요가 있을듯 싶다. 민정당의 경우 신데탕트라는 유리한 국제정세를 活用하여 과거의 전통우방국에 한정된 ‘반쪽외교’를 넘어 전방위외교를 전개함으로써 國力에 걸맞는 외교역량을 강화하여 北韓에 대한 외교적 우위를 점하고, 대내외적으로는 국내시장개방압력, 수출둔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經濟의 活路를 찾

3) 民正黨 기획조정실 “政策參考資料”(1989.11.24), pp.7-8.

는 한편, 政治적으로 여소야대의 수세 局面을 벗어나고 현안문제를 어느 정도 희석시키는 정통성 強化策으로 活用하고자 한 점이 일정부분 관측된다. 반면에 야당인 평민당과 민주당의 경우 대외적 측면에서 보다는 對內的 側面에서 추진배경의 特徵이 두드러진 듯하다. 그들 양당 지도자간의 競爭的인 관계는 차치하고라도, 제 1야당과 제 2야당으로서 북방정책의 주도권 장악은 수권가능정당이라는 대국민 이미지는 물론이고 國內政治狀況에서 자당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관건적인 문제로 판단했던 듯 하다. 따라서 여당인 민정당이 공식외교관계가 없는 國家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 없는 제약 요인을 전제로, 평민당과 민주당은 각각 競爭的일 만큼 북방정책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전력투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평민당의 북방정책은 북한고립화 반대, 國內政治의 민주화와 북방정책의 동시추진, 군축을 통한 平和的 분위기 형성 등에 좀 더 강조점을 두었다는 점에 特徵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민당의 정책적 기조는 蘇聯, 中國, 동구제국과의 관계 개선을 實現함으로써 외교영역을 擴大하며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교역증대와 자원공급의 擴大라는 實益追求와 정치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기반의 조성을 목표로 설정한 데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⁴⁾ 평민당은 북방정책에 있어 對北韓政策에 좀더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바, 이는 金大中 총재와 평민당이 1987년 총선에서 재야인사를 유입했다는 점에 기인한 바 크다.⁵⁾ 평민당은 北韓을 고립상태에서 끌어내기 위해 北韓이 美·日 등의 우방국과 관계개선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고 보고

4) 조순승, “平民黨의 北方政策”, 평민당 政策委員會 편, “政策과 展望”(서울 : 학민사, 1989), p.247.

5) 서경원의원 방북사건은 그 代表的 예이다. 지도부와 협의없이 단독방문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나, 이 事件으로 인해 평민당이 받은 타격은 적지 않으며, 이후 평민당이 북방정책에 좀 더 신중하고 소극적 자세를 보이게 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있다. 평민당은 북방정책의 일환으로 헝가리를 방문한 바 있으나 대소정책에 대해서는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民主黨의 북방정책은 1989년 6월 金泳三 총재의 訪蘇와 뒤이어 8월 말 민주당의원들의 방소에 의해 극명하게 상징된다. 민주당은 북방정책에 있어서 1988년 6월 김총재의 “平和와 統一을 위해서는 어느곳이라도 찾아갈 용의가 있다”는 국회연설과 그해 8월 동경의신기자클럽에서의 6個國議員協議體 구성제의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김총재와 핵심당직자들 간의 전격적인 소위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된 감이 없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어 진다.

민주당의 대소정책은 김총재의 방소활동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고 보는 것이 전문가 대부분의 공통적인 견해일 것이다. 우선 蘇聯이 國家機關이며 당소속으로 되어 있는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IMEMO)를 통해서 국내정치인 가운데 왜 김영삼 총재를 초청했는가 하는 이유를 살펴보자. “김총재를 방소 초청정치인으로 선정한 것은 김총재의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평화구상이 가장 現實的이며 온건하고 合理的이며 또한 차기 정권인수자로서 可能性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⁶⁾ 누구를 초청하며 그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蘇聯 내부에서 심각한 論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 대해 필자가 보기에는 蘇聯이 마치 구한말 국내 여러 세력중 즉 친러파, 친일파 등 갈등을 이용하는 것 같은 인상을 피하려고 상당히 고심했던 흔적이 엿보이며, 다른 한편 그 때 당시 양국간의 공식접촉을 시기상조라고 소련이 판단하지 않았나 싶다. 아울러 向後 韓·蘇關係의 원만

6) 民自黨, “平和와 統一의 罅원을 안고”, (1989), p.18.

한 접촉을 위해서는 韓國內 야당의 지원이 절대 必要할 것이라고 예측했던 것처럼 보인다. 여하튼 김총재의 방소는 “최초의 공식적인 방문으로서 韓蘇關係의 정상화를 위한 기초공사를 구축하였다. 즉 韓蘇關係의 대립과 단절의 관계로부터 교류와 대화라는 양국관계로 바뀌놓은 새로운 장을 歷史的 정치사건이라고 생각한다”⁷⁾는 본인의 자평처럼 국내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김총재의 방소는 당시 제2야당의 지위로 격하된데다 1989년 영등포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패배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당시의 김총재와 民主黨에게 새로운 活力을 찾게 해 준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나아가 이 방소의교는 후일 3당 통합과 관련해서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김총재 자신이 日本 “요미우리”신문에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蘇聯訪問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김총재는 政府側의 협조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방소기간중 김총재의 행동도 國益優先의 초당의교라는 차원에서 조율되었던 것으로 관측되었는데, 그것은 특히 北韓의 허담 조국평화통일위원장과의 회담내용과 귀국시 미국을 방문해서 앞으로 대소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계속 긴밀한 협조를 할 것으로 약속한데서 보여진다. 아울러 귀국후 노태우 대통령과의 會談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음이 최근에 밝혀진 바 있다. 그러한 立場은 뒤이어 8월말에 있었던 민주당 의원들의 방소활동기간 중에서 동일하게 견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民主黨의 대소정책과 蘇聯에 대한 시각은 民主黨의 것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굳이 차이를 들자면 民主黨

7) 위 의책, p.20.

8) 民主黨, “소련방문활동보고”, (1989.9).

黨이 소련과의 직접 접촉이 곤란했던 반면 民主黨은 야당이라는 프리미엄으로 좀 더 자유로웠다는 점, 그래서 방소성과를 國內政治狀況에서 자당의 입지강화책으로 아무런 부담없이 적극 活用할 수 있었다는 점등을 지적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끝으로 共和黨의 북방정책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해야 할 것 같다. 제 3야당인 공화당은 소극적 신중론 내지는 대소경계론적 입장을 취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金鍾泌 공화당 총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소관계개선 속도에 관해 지나치게 빠르다는 立場을 보여왔는 바, 최근 김영삼 민자당 최고위원 방소결과에 대한 평가에서 訪蘇 러시아에 대한 비판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대소접근에 속도위반은 없지만 기대가 너무 성급하다. 蘇聯은 하루 이틀내 후딱 바뀌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다.

1989년 후반기 동구권은 거대한 變革過程을 겪었는데 冷戰體制의 象徴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짐으로써 절정을 이뤄 國內에 한반도 統一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켰다. 國內적으로는 6공화국 이래 내내 국내 최대현안문제였던 5공청산이 1989년 12월 31일 여하튼 全斗煥 前大統領의 국회증언으로 종결되었음이 각 당간에 명시적, 묵시적으로 합의되었다. 이러한 국내외적 狀況속에서 정계개편논의가 진행되어 오다가 1990년 1월말 민정당, 민주당, 공화당은 들연 전격적으로 합당을 선언하였다. 이는 國內政治에 일대 파란을 예고하였고 여소야대 정국에서 거대여당, 왜소야당으로 정국을 일변시켰다.

여기서 합당후의 각 政黨의 대소인식과 政策에 대한 論議를 계속 진전시키기 전에 왜 3개 정당이 民自黨으로 통합하였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이후 전개될 대소정세의 韓蘇關係의 진전에 대한 國內政治的 배경으로서 이

해를 도울듯 싶다.

민자당은 “3당통합은 구국의 결단이다. 이대로 가면 금년중 위기상황으로 가서 經濟 및 사회질서는 수습할 수 없는 단계로 가고 만다”는 시국관을 토대로, 保革構圖를 論理的 근거로 3당합당을 정당화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⁰⁾ 사실 6공화국은 출범 이래 5공청산과 악법개폐라는 핫이슈에 부딪쳐왔으며, 조직노동대중의 운동역량이 강화되어 분배정의실현등 새로운 정치세력이 대두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야당도 입장만 다를 뿐 문제의 본질은 동일했던 것으로 관측되어졌다. 각 정당은 최대목표인 차기집권구도의 창출을 위해 부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는 바, 차기집권이 용이하지 않은 바에야 일정한 規模의 절대적 지지세력을 確保하고 있는 平民黨을 제외한 3개 政黨이 타당과의 權力을 분점하여 안정적인 차기집권구도에 합의하여 3당통합이 이뤄졌던 것으로 일부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따라서 그 후 國民的 요구가 없는 상태에서 공통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이 합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따가운 눈총을 받았던 3黨統合은 일반국민들에게 이제 어느정도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여겨지는 것처럼 보인다. 한편 민자당은 최근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의 蘇聯訪問을 통한 한소수교를 위한 양국 집권층의 공감대를 폭넓게 擴散시키는 분위기 造成과, 다방면에서의 한소교류를 합의했다는 點에서 상당한 成果를 거두고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방외교의 중착점이 南北韓 관계개선과 平和的 통일이라 한다면 이는 바로 그 전단계인 中國과 蘇聯 특히 蘇聯과의 관계정상화가 가시권 내로 들어왔다는 것을 뜻할 것이다. 그를 위해 금년 5월 朴哲彦 政務長

9) “신사고 신정치로 民主化와 統一을”, p.30 (이것은 1999.2.13. 관훈클럽 招 請討論會에서 김영삼최고위원이 행한 질의 應答을 기록한 소책자이다.)

官을 團長으로 한 政府代表團이 蘇聯을 방문하여 수교를 위한 實務協商에 착수할 것이며 다른 한편 김최고위원은 中國도 방문할 計劃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아가 韓蘇兩國은 한반도의 조기평화정착을 實現시키기 위한 南北間 대화분위기 조성과 韓國의 UN가입노력을 지원하며, 蘇聯은 南韓의 단독가입이든 南北韓 동시가입이든 적극 노력할 것에 합의하였다. 아울러 군축문제도 전향적 자세로 접근하며 蘇聯은 北韓에 최근 신무기공급을 자제하고, 韓國도 주한미군철수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검토하기로 하였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상의 민자당의 訪蘇成果에 대한 평가는 대개 두가지로 나뉘볼 수 있을 듯하다. 하나는 肯定的인 側面으로서 6공화국의 北方政策은 동구와의 수교에 뒤이어 蘇聯과의 수교를 가시화시켰다는 점에서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로써 北韓에 대한 외교적 우위를 確保함으로써 한반도의 안보체제확립, 나아가 동북아의 안정구조가 조만간에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적 立場이다. 다른 하나는 신중론 내지는 비판적인 것으로서 3黨合黨의 정당성을 보강하려는 의도와 김최고위원의 입지강화책으로 이용될 것이라는 점, 우리측이 서두르는 듯한 입장을 드러내 협상전략에서 미숙했다는 점, 蘇聯의 진정한 의도에 대한 진지한 研究없이 지나치게 단기적인 現實的 이해관계에만 치중했다는 점, 그리고 韓國의 발전에 기여했던 美國과는 달리 아무런 기여도가 없었던 蘇聯에게 불로소득을 안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등이 그것이다.

다른 한편 3黨合黨이 이뤄진지 얼마 안되는 狀況속에서 진행된 방소가

미처 진열정비를 채 이루지 못한 狀況에서 당최고부문에서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우기 蘇聯이 이를 역이용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해 우려가 加重되고 있는 듯이 보이며 이에 대한 對應策을 요구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合黨後의 平民黨은 전반적으로 불매 北方政策 특히 대소정책에 대해서는 주도권을 빼앗긴 것이 아닌가 싶다. 특히 서경원 의원의 秘密訪北 사건으로 야기된 위기후 보혁구도라는 論理를 내세운 민자당에 대해 명분을 주지않기 위해 平民黨은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平民黨의 北方政策에 대한 기본 입장은 지속되는 듯하다. 단지 민자당 김최고위원의 방소성과에 대해 수교자세가 너무 성급하는 점, 외교문제는 國民的 합의내지는 여야합의를 기초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점을 그리고 한소관계만큼이나 대북한정책 특히 남북대화재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論評으로 지적하는 狀況이다.

끝으로 조만간에 창당할 것으로 알려진 진보적인 政治勢力은 아직 뚜렷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다. 다만 在野라는 社會勢力이 정치세력으로 轉換하면서 약간의 政策的 차이를 드러내겠지만 그 뿌리를 在野進歩勢力(제 3 장 참조)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진보적인 정당은 앞으로 韓蘇間의 變化의 추이를 관망하면서 태도를 決定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다분히 가변적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들은 韓蘇關係의 파장이 國內政治로 환류되는 과정을 중시하여 그 영향에 초점을 둘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대소정책과 한반도 통일문제의 상관

성에 주목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蘇聯의 비핵지대화론에 관심을 갖고 韓蘇國交樹立과 韓半島의 군축문제의 상관성에 주목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진보적인 정치세력이 北方政策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히 제약되어 있다는 사실도 아울러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Ⅲ. 주요 社會勢力의 對蘇認識 및 韓蘇關係 發展에 대한 視覺

現實的으로 韓·蘇 양국은 年內 공식수교를 앞둔 정도로 관계가 발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에 대한 韓國內의 주요 社會勢力의 소련인식에 대한 체계적인 分析은 나타나고 있지 못하다. 이것은 두가지 이유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88서울올림픽을 전환점으로 하여 급격히 발전해 온 양국관계의 진전속도에 비해 社會勢力의 소련인식이 체계적으로 표출될만한 時間이 없었기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이와 관련된 것으로 蘇聯에 대한 이미지를 체계적으로 갖출만한 기회(이를테면 문화적 교류를 포함한 다양한 形態의 교류)를 갖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韓國內의 주요 社會勢力의 소련인식 및 韓蘇關係發展에 대한 시각을 부분적으로 예측해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음직하다. 이것은 앞의 장이 현단계의 韓蘇關係와 韓國의 국내정치 의 상호연관성을 分析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한다면 이장은 앞으로의 상관성을 어느정도 전망해보는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韓國內의 주요 社會勢力에는 기업가, 군부, 대학생(운동권) 및 재야진보세력, 社會階層으로서 노동자·농민·지식인, 그리고 南北韓 분단의 산물인 월남민 등의 勢力이 包含된다. 여기에서 이들 社會勢力이 과연 소련에 대해 어떻게 認識하고 韓蘇關係의 발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韓國의 정치·사회현실을 근거에 깔면서 分析하기로 한다.

1. 企 業 界

韓國의 企業家의 경우는 우선 기본적으로 시장진출 및 資本・技術合作과 관련하여 蘇聯과의 적극적인 관계개선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韓國의 大企業의 성장과정은 필연적으로 수출주도형 經濟政策과 맞물려 전개되었으므로 언제나 새로운 市場을 開拓하려는 열망과 의지를 지닌 것이 기업가이다. 특히 美國・日本과의 통상마찰의 可能性이 점차 증대하고 있고 유럽 시장진출에는 日本과의 競爭이라는 부담과 지역위치상의 한계로 인해 기업가들은 아시아인접지역에서 적극적으로 경제교류의 카운터파트너를 찾아내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企業家들의 노력은 동남아시아의 진출의 예에서나 80년대 중반이래의 中國과의 경제교류 본격화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바 있으며 최근 韓國大企業 소련진출붐에도 여실히 증명된다. 韓國政府가 북방정책으로 소련에의 접근을 가속화하게 된 것도 사실 그 이면에는 韓國의 大企業의 이해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韓國企業의 中國市場進出 및 合作事業에서는 그 성과는 미미할지 모르지만 大企業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데 이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문화적 유사성, 지리적 인접성이나 現 中國의 경제사정상 까다로운 시장진출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도 중소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손쉽게 中國과의 교류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비해 蘇聯市場進出 및 合作事業의 경우는 韓國의 大企業들은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데 비하여 문화적 이질성과 정보부족, 중개인(전문가)의 결여,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으로서 蘇聯이 요구하는 經濟部門의 제한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엄두를 못내고 있고 실제로는 한・소경제교류에서 소외되고 있는 듯하다. 특히 蘇聯이 대형 기본건설 프

로젝트를 시베리아·극동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있는데 이는 韓國의 大企業이 아니고서는 參加에 관심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예컨대 현대그룹은 蘇聯 시베리아·극동지역의 資源開發에의 공동참여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중소기업으로서는 이런 일에 參加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그리고 韓國產 경공업제품을 蘇聯이 수입할 경우에도 韓國大企業의 종합무역상사가 그 일을 대행하는 경향이므로 역시 중소기업의 參加可能性 축소는 마찬가지다. 물론 일부에서는 성공한 경우도 있다.

예컨대 모피수입 가공수출에 성공한 진도모피와 같은 모험기업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中小企業들은 동남아나 中國進出에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狀況인 것은 틀림이 없다.

이같은 경향으로 인해 大企業은 대부분 소련진출 전담반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蘇聯과의 자본·기술협력 및 수출입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의 연장선에서 韓蘇關係 발전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특히 공식수교가 되지 않은 점이 경제교류 活性化를 가로막고 있다고 大企業은 생각한다. 소련측이 공식수교를 회피하면서 경제교류만 열심히 강조하던 狀況에서, 韓國의 大企業들은 공식수교에 기초한 갖가지 보증과 일어날 수 있는 分爭의 해결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위험부담을 느껴 蘇聯과의 경제교류에 의심과 우려를 갖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韓蘇關係의 발전이 공식수교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펴는 것이 大企業의 企業家라고 한다면 중소기업 기업가들은 韓蘇關係의 발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소기업 기업가들이 韓蘇關係의 발전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소극적 지지라고 생각한다.

2. 軍 部

韓國 軍부의 경우 기본적으로 1) 韓國戰爭 이래 反共戰線의 최선봉에 있어왔고 2) 軍은 통상 '安保'의 觀點에서 모든 문제를 파악하고 있으며 3) 韓國軍과 주한미군의 관계라는 면에서 韓國 軍부는 미국과 密接한 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韓蘇關係의 급진전에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蘇聯의 평화공세가 자칫 한반도 지역의 군사적 균형을 깨지나 않을까를 우려하기도 한다. 따라서 韓國 軍부는 韓美軍事同盟體制의 틀을 깨지 않으면서 蘇聯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할 것을 강조하는 경향이다.

蘇聯이 급격한 군축논의를 들고 나올 可能性이 있다는 측면, 이의 결과로서 군사적 균형에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 그리고 넓게는 韓蘇關係의 발전에 따라 國民들의 안보의식이 약화될지도 모른다는 측면 등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한국군부는 蘇聯과의 적극적인 관계개선에 다소 우려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만약 한반도의 군축문제가 전반적인 일정에 올라 군병력 감축문제가 제기될 때 가장 심각한 것은 직업군인(하사관이나 초·고급장교를 망라한)의 예편과 새로운 취업고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금 당장 전개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한국군부에서 韓蘇關係의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으나, 韓蘇間의 공식수교가 現實化될 때 그에 뒤따르는 결과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출할 可能性이 없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 大學生 및 在野進步勢力

일반적으로 韓國의 대학생들은 韓蘇關係의 개선보다는 소련자체의 變化에 대해 흥미있게 바라보는 경향이다. 처음에 발전된 社會主義國家 蘇聯에 대

한 호기심에서 출발하여 蘇聯의 급격한 政治・經濟的 變革을 보면서 蘇聯과 사회주의 자체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그 예로 사회주의의 改革狀況과 소련에 관한 간략한 論文이나 論說類의 글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각 대학신문에 집중적으로 게재되는 경향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생들은 蘇聯의 변화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갖는 정도이고 蘇聯에 대한 이미지는 戰後世代여서 나쁜편이 아니다. 특히 대학생들의 反美意識이 증가되어 온 경향에 비추어 韓國・蘇聯關係史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라기 보다는 무관심하거나 肯定的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韓蘇關係의 발전에 대해서는 대학생들이 肯定的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최근 대학생들의 사회주의권 시찰, 방문을 통해 蘇聯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학생운동권은 소련인식면에서는 일반대학생과 별반 다르지 않고 반미의식과 蘇聯社會主義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학생운동권 내부에서는 蘇聯의 급진적인 政治・經濟改革을 놓고 보다 나은 사회주의로의 이행으로 보는 입장과 위기론의 입장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다. 또한 韓蘇關係의 발전에 대해서는 肯定的으로 평가하는 입장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으며 아직도 양입장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채 논쟁이 진행중이라고 한다. 前者의 논리는 한소관계의 진전에 따라 장기적으로 韓國內의 國家保安法의 명분이 없어질 것이며 사상의 자유를 獲得할 수 있어 진보적 정치세력의 형성이 可能해질 것이며, 나아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後者의 논리는 한국집권층이 蘇聯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반복한적 國家保安法을 유지할 것이며 사회주의 몰락론과 反北이데올로기 공세를 강화할 것이므로 진보적 정치세력을 친북으로 몰아 고립시킬 것이며, 나아가 한소관계의 발전에 교차승인으

로 이어져 ‘두개의 韓國’상태로 되어 결국 분단을 지속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이같은 학생운동권 내부의 입장은 韓國內의 진보적 지식인의 입장이 분리되고 있는데서 연유하며 이러한 극단적으로 상반된 평가는 韓國의 재야 진보세력에서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 재야진보세력은 학생운동권에 비해서는 現實的인 태도를 취해왔음을 볼때 韓蘇關係의 발전이라는 대세의 흐름을 어떻게 活用할 수 있는가에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야진보세력은 蘇聯이 한반도의 군축문제를 적극 제기할 때 비로소 蘇聯을 平和勢力으로 인정할 듯하며 蘇聯의 한반도 政策中에서 군축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편으로는 재야진보세력은 3黨 통합구조하에서 집권세력이 蘇聯과의 관계개선을 國內政治的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유의하면서 蘇聯의 의도에 대해서도 의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들은 3당통합에 맹렬히 반대하고 있는 데 정권측의 정책 가운데 국내정책의 국민적 好應이 적은 상황에서 북방정책을 통해 國民的 지지를 얻으려고 한다는 점에 비판적이다. 특히 북방정책으로 이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韓國의 北韓孤立政策이나 ‘2個의 韓國’政策에 소련이 동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때 재야진보세력은 蘇聯의 한반도정책이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지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갖고 있다기 보다 蘇聯의 對韓 정책을 觀察하는 대응책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勞働者와 農民

韓國의 일반노동자들은 대체로 社會主義國家 蘇聯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없었으며 별반 관심이 없는 편이었다고 할 수 있는 데, 최근 노동운동의 活性化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들은 蘇聯이 노동자 중심적인 國家라는 막연한 감정과 관료주의 등의 제문제를 갖고 있어 改革이 불가피하다는 言論 報道로 실망감을 갖거나 그래도 노동자사회라는 선의의 기대를 갖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노동자들은 蘇聯에 관한 관심정도에 비해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절대적인 情報量의 부족으로 노동사업자의 교육에서 노동운동지도자들에게 질문공세를 퍼는 경우가 흔히 있다고 들린다. 이것은 蘇聯에 관한 보도나 기존학계의 研究內容이 노동자들에게 만족할 만한 것이 못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일반 노동자는 蘇聯에 관한 관심이 그다지 크지 않은 데 비해 일부 지적수준이 높은 노동자들은 큰 관심을 갖고 있으나 실제 소련노동자들의 삶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갖지 못한 점에서 막연한 관측만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韓蘇關係의 발전에 대하여 노동자들은 일반적으로 언론보도매체의 영향으로 인하여 소극적으로 환영하는 정도로 보인다. 그러나 韓蘇關係의 발전에 따라 경제교류가 가속화되며 資本移轉이 본격화되어 韓國內에 산업구조, 특히 취업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황이 오면 비판적으로 태도를 轉換시킬지도 모른다. 韓國內에서 임금인상요구가 거세지면서 일부 企業家들이 동남아 등지의 海外投資에 눈을 돌릴때 이에 대한 노동자의 비판이 적지 않았음을 볼때, 大企業의 蘇聯進出이 실업을 발생시킬 잠재적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한소경제교류의 발전이 고용구조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가인데, 이것은 일정 시간이 흘러야 판명될 수 있는

성격이다.

그러나 産業部門中에서도 중동의 해외취업으로 경제적 利益을 얻어 왔던 토목·건축분야의 기술자·노동자들은 새로운 해외사업을 希望하고 있는 형편이므로 蘇聯 시베리아·극동지역 開發에의 韓國參與에 대해 肯定的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韓國政府의 정책결정 과정에서는 노동자의 의사보다는 企業家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므로 급격한 정치변화가 있기 전에는 노동자의 입장과 태도가 韓蘇關係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농민들은 대체로 일반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社會主義國家 蘇聯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없고 별반 관심이 없는 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같은 狀況은 그다지 변할 것 같지 않다. 그리고 韓國의 농민들은 전통적으로 대세순응적이면서도 반외세적인 성격을 보여왔으며, 최근의 경우 美國의 농축산물 도입과 관련하여 반미의식이 고양된 狀況임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볼 때 외국의 농축산물 도입이 國內의 농민에게 구체적인 타격을 주지 않는 한 農民의 이해관계에 별다른 저항과, 반감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狀況으로는 韓國 농민들이 한소관계의 발전에 적극적 반대는 없다고 생각되며 가장 무관심한 階層이 아닌가 싶다.

5. 知識人

韓國의 지식인을 蘇聯認識 및 韓蘇關係 발전에 대한 시각이라는 측면에서 區分할 때 肯定的이며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지식인과 비판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지식인으로 나눌 수 있다.

蘇聯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지식인은 韓國의 북방정책이라는 새 조류

속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그룹으로 蘇聯과의 학술·문화교류에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으며 소련인식도 상당히 肯定的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개 蘇聯의 새로운 改革措置들의 당위성을 韓國에 소개하면서 소련의 개혁이 성공하기를 希望한다. 이 부류의 지식인은 지금 蘇聯과의 접촉 창구를 각각 개설하려고 움직이는 경향을 보인다. 이들 지식인은 韓蘇關係 발전을 肯定的으로 보고 보다 가속화되길 希望한다. 그러나 이 그룹은 아직 극소수 지식인(대학교수, 言論人 등)에 제한된다고 보이며 일부 인사는 蘇聯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親美, 親日的 성향을 가지고 있는 지식인들의 경우 일부가 蘇聯接近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은 내면적으로 다소 우려와 긴장을 가지면서도 세계조류의 變化와 관련하여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내세우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은 기본적으로 최근 蘇聯의 변화를 社會主義 몰락론적 관점에 서서 보려고 한다. 또한 이들은 韓蘇關係의 발전에 대해서는 기존 美國·日本 등과의 관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진전되어야 할 것이라는 신중론을 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민족주의적 경향의 지식인은 한국근대사를 상기시키면서 舊韓末에 한반도가 열강의 각축으로 침탈당했고 결국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전락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內部的 分裂이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물론 舊韓末의 狀況과 지금의 國際的 상황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認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蘇聯의 韓國에 대한 접근이 단순히 經濟的인 이유에서 만은 아니고 韓半島에 있어 蘇聯의 영향력을 擴大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이유도 크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蘇聯이라는 외부세력이 새로이 진입함으로써 야기될 韓半島 주변국가들의 複雜한 상호작용관계와 이것이 韓國의 국내정치 그리고 南北韓關係에 미칠 부정적 영

향을 우려하는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들가운데 일부는 韓蘇關係의 改善이 지금까지 美·日에 편중되어온 韓國이 自主性を 강화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수도 있다는 肯定的인 측면을 인정하기도 한다.

결국 민족주의적 성향의 지식인들의 최근 韓蘇關係에 대한 시각은 복합적이라 말할 수 있겠다. 즉 대소접근에 신중성을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韓蘇關係의 改善을 韓國의 國益增進을 위하는 쪽으로 잘 活用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6. 越南失鄉民

해방 이후 北韓에서의 공산화를 피해서, 또는 한국동남중 월남한 이른바 “失鄉民”들은 共產體制下에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대부분 매우 강한 反共主義的 性向을 가지고 있으며 蘇聯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소련을 위시한 社會主義國家들에 있어서의 최초 변화를 社會主義의 몰락과정으로 보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주의권의 변화가 北韓의 개방화와 體制變化를 유도하기를 매우 希望하고 있다.

이들은 蘇聯에 대한 불신감이 크고 따라서 기본적으로 反蘇的이기 때문에 韓蘇關係의 발전이 자칫하면 國民들의 공산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惡化시키고 특히 國家安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韓國의 대소접근을 신중해야 하며, 특히 금후에 蘇聯이 北韓에 대한 태도, 무엇보다도 金日成體制的 몰락에 어떠한 구체적인 영향력을 行使하는가의 귀추를 보아가면서 韓蘇關係의 발전을 추진해야 할것으로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이러한 태도는 韓蘇關係의 改善을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IV. 結 論

지난 2년간 韓·蘇關係는 극적인 진전을 보였다. 김영삼민자당 최고위원은 90년 3월 그의 두번째 蘇聯訪問에서 고르바초프를 만난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韓國과 蘇聯의 관계정상화가 절실히 요구되며 민자당의 소련공산당과의 黨對黨 관계 또한 의미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양국간의 이러한 관계발전은 불과 몇달전만 해도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韓·蘇關係의 관계개선이 韓半島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도움을 주는 동북아의 平和的인 국제환경을 조성하고 韓國의 경제에 活力을 불어 넣는데 肯定的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과 관련하여 韓國國民들은 한소관계의 새로운 발전에 대해 비교적 肯定的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각 정당들은 國民들의 이러한 입장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점은 각 정당들로 하여금 競爭的으로 蘇聯에 접근하도록 하는 요인이 되었다. 실제로 한소관계 정상화 추진의 必要性은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을 민주자유당으로 統合하는 데 부분적인 구실이 되었다.

한편 현재 진행중인 韓·蘇關係改善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도 존중한다. 첫번째의 비판적인 의견은 蘇聯이 본질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이고 특히 北韓에 대한 주요 지원국이라는 점과 관련하여 현재 政府가 安保問題의 근본적인 해결이 없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소련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한소간의 급속한 관계발전이 政治·經濟的으로 가장 중요한 전통적인 韓美關係를 해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한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미소관계가 계속 改善되는 상황에서는 說得力이 감소할 것이며 政治爭點으로 등장하지도 않을 것이다.

두번째의 비판적 의견은 韓蘇關係의 급속한 발전이 北韓을 더욱 고립시

키고 이것이 南北韓 관계에 부정적으로 作用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의견은 주로 좌경적 색채를 띤 團體의 주장인데 蘇聯, 동구의 급격한 변화는 北韓에서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할 것이라는 점 때문에 이미 說得力을 잃어가고 있다.

세번째의 비판적인 의견은 韓國內 각 政黨들이 韓蘇關係 개선을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韓國의 정치지도자들이 구체적인 計劃과 원칙이 없이 소련과의 관계개선을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한다.

최근 민자당 간부들의 소련방문이후 민자당내에서 표면화 된 민정당세력과 민주당세력간의 갈등은 이러한 우려를 더해주고 있다.

이러한 비판적 의견을 除外하면 한소관계정상화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는 政黨이나 社會團體들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韓蘇關係가 국내정치에 막대한 影響을 미칠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

앞으로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답을 제시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이다. 다만 韓國의 國內政治와 韓蘇關係의 상호작용은 소련의 국내정치 발전과 蘇聯의 변화에 따른 蘇聯의 對韓政策變化에 크게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韓國의 지속적인 民主化와 蘇聯研究붐으로 인해 蘇聯과 관련된 다양한 利益團體들이 점차 부상하고 한국국민들이 蘇聯에 대한 情報를 보다 廣範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韓國人들의 蘇聯에 대한 인식도 보다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다. 그리고 個別的인 狀況에 따른 정치적 爭點도 생겨날 것이다.

韓 - 美 軍事關係와 韓 - 蘇關係

車 榮 九
(韓國國防研究院)

目 次

I. 序 論	39
II. 韓 - 美 軍事關係의 將來	41
III. 韓 - 蘇關係와 蘇聯의 對韓政策	54
IV. 韓半島 平和保障을 위한 우리의 課題	65

I. 序 論

韓 - 美 軍事關係와 韓 - 蘇關係는 특히 1989 년도부터 현재까지 新聞 머리 기사를 장식하는 사건들의 가장 큰 소재라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韓 - 美 軍事關係와 관련된 것들은 1989 년 여름부터 美議會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거론되었고, 드디어는 넌·워너 修正案의 통과로 결론이 난 駐韓美軍의 規模減縮 및 駐韓美軍의 役割調整과 연계되어 지난 2월 美國防長官의 訪韓으로까지 이어졌던 일련의 사건들이다.

韓 - 蘇關係와 관련된 것들은 韓 - 蘇 貿易事務所 設置 및 領事業務 시작, 여러 정부 각료를 대동한 金泳三 民主自由黨 最高委員의 모스크바 訪問豫定, 戰略物資인 농축우라늄의 10년 對蘇 長期購買契約 締結豫定, 서울 - 모스크바의 定期航路開設 豫定, 50억 달러 규모의 시베리아開發事業에 대한 現代建設 참여, 蘇聯 世界經濟 및 國際關係研究所(IMEMO)의 쿠나제 韓·日政治問題研究部長의 “韓 - 蘇간의 國交樹立은 시간문제다. 北 - 蘇간의 同盟關係는 변질되었다. 蘇聯은 韓國의 유엔 單獨加入을 반대하지 않는다. 韓 - 蘇關係改善은 北韓의 對美 - 日 關係改善과 連繫되지 않는다”는 최근의 인터뷰 내용 등 韓 - 蘇간의 政治·外交·經濟關係 급진전을 의미하고 있다.

이같은 상반된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고, 이러한 變化가 韓半島의 將來에 과연 어떤 影響을 줄 것이며, 韓半島의 平和와 安定을 위해 바람직한 韓 - 蘇, 韓 - 美關係의 설정은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문제에 대한 모색은 이제 우리의 중요한 관심사라 할 수 있다.

물론 韓 - 美 軍事關係의 性格變化와 韓 - 蘇關係의 급진전이 상호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兩者가 條件的으로 또는 相互對立(Zero-Sum) 的으로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1990년대 國際關係의 불가피한 추세의 결과로 나타난 필연적 變化라고 보며, 이를 상호 연계시키지 않고 相互補完(Non-Zero-Sum)的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韓半島의 平和와 安定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고르바초프의 등장은 蘇聯自體의 體制改革은 말할 것도 없고, 美-蘇 軍事關係의 質的 변화와 오늘날 東歐의 民主化改革까지 가져오게 한 결정적 觸媒가 되었다. 蘇聯이 지난날의 對決的 構圖下에 유지해온 冷戰的 外交政策路線을 탈피해 나가는 확실한 政策을 추구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韓-蘇간의 關係改善을 막는 어떠한 障礙要因도 이제 의미가 없어졌으며, 韓-美 軍事關係도 그 자체가 對蘇 攻擊을 위한 同盟이 아니라 韓半島 平和保障을 위한 최소한의 保障裝置라는 점에서 韓-蘇간의 政治·經濟·外交 交流에 阻害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이 論文은 이러한 基本假定下에서 90년대에 예상되는 韓-美 軍事관계의 變化展望을 먼저 살펴보고, 韓-蘇關係의 현재와 장래를 검토한 뒤, 韓半島의 平和와 安定을 위한 몇 가지 政策代案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

Ⅱ. 韓 - 美 軍事關係의 將來

美議會를 중심으로 駐韓美軍의 減縮과 관련하여 일고 있는 일련의 論爭은 美 - 蘇간의 新데탕트와 美國의 財政赤字 問題로부터 출발한 海外駐屯兵力의 재검토, 同盟國에 대한 방위비 증가 요구 등과 연계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일시적이라기보다는 美國의 軍事戰略 自體가 재조정되는 구조적 변화의 신호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駐韓美軍에 관한 최근 논의의 特徵을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지난날의 減軍 논쟁이 美國의 對蘇 軍事戰略의 변화에 주로 기인하였다면 오늘날의 論議는 군사적 이유보다는 美國 經濟力의 상대적 저하에 따른 美國 軍事費의 축소 조정과 同盟國과의 책임분담 문제에 기인하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韓 - 美간의 무역갈등을 포함한 經濟的 이유로부터 연유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과거의 減軍 論爭이 소련의 군사태세나 戰略의 큰 변동없이 美國의 일방적 필요에 의하여 추진되었다면, 이번에는 美國 못지 않게 蘇聯의 軍事戰略도 본질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美·蘇가 진정한 의미에서 軍備縮小의 의도를 가지고 海外駐屯軍의 규모축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韓半島를 둘러싼 국제적 여건이 駐韓美軍의 부분적 감축을 유리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는 점이다. 北韓이 과연 변했는가 하는 점은 아직 확실하지 않으나, 韓國과 中·蘇와의 접촉과 교류가 활발하게 진전되고 있고 北韓에 비하여 월등한 韓國의 經濟力에 비추어 南 - 北韓간의 현재의 軍事的 不均衡의 의미가 과거보다 약해진 까닭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北韓은 초조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中·蘇 모두 韓半島에서 위기가 발생하는 것에 반대할 것이라는 側面 등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지난날의 駐韓美軍 減縮은 駐韓美軍 혹은 美國에 대한 韓國 國民의 批判的 시각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美國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으로 이루어졌으나, 오늘날은 1980년대 이후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한 反美運動 혹은 反美感情이 일부 國民의 호응을 받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韓-美關係를 대등한 방향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韓國 國民의 要求가 있다는 점이다.

최근 韓國의 한 新聞에서 실시한 輿論調查에 의하면, 美國을 좋아한다는 응답자는 1984년의 70%에서 1989년에는 30.1%로 감소한 반면, 싫어한다는 응답자는 각각 3.3%에서 12%로 크게 增加하였다. 이 調査는 또 美國에 대한 감정이 반반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984년의 24%에서 1989년에는 52%로 增加하였다고 되어 있다.¹⁾ 즉 19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美國을 싫어한다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데 반하여 오늘날은 8명 가운데 1명이나 되며 과반수가 美國에 대해 客觀的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서, 이는 美國을 보는 韓國 國民의 태도에 엄청난 변화가 이미 생겼다는 점을 보여준다.

최근 논의의 이같은 特徵은 곧 앞으로 駐韓美軍에 관한 논의는 단순히 駐屯 兵力의 적정규모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보다 장기적 차원에서 韓-美 군사관계의 새로운 모습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구상을 찾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이며, 韓-美간의 협의도 그같은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1) 「동아일보」, 1989년 4월 1일자.

1990 년대의 韓 - 美 同盟關係 재조정 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이슈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① 駐韓美軍의 駐屯 目的이 韓半島에서의 戰爭抑止를 위한 인계선 (Tripwire)으로서의 역할에 있다면, 과연 현재 규모의 4 萬 3 千명이 반드시 필요한가?
- ② 韓半島의 戰爭抑止에 美國의 戰術核이 반드시 필요한가? 즉 韓 - 美의 재래식 동맹 군사력만으로 北韓의 南侵을 억지할 수는 없는가?
- ③ 韓國軍에 대한 美國의 戰・平時 作戰統制權 保有가 지금도 필요한가?
- ④ 南 - 北韓間의 對話 및 韓半島 緊張緩和 추구를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은 긍정적인가?
- ⑤ 지난날 韓國 防衛에서 주된 역할을 담당해 온 駐韓美軍이 앞으로는 韓國軍에 대한 보조적 역할만을 수행해야 하지 않는가? 실제 역할 변화가 불가피하다면 보조적 역할을 하기위한 적정규모의 美軍은 어느 정도이며 戰力 構造는 어떠한가?
- ⑥ 板門店 管理 등 美國이 수행하고 있는 DMZ 내의 임무를 계속해야 하는가?
- ⑦ 팀스피리트訓練 등 韓 - 美 聯合訓練은 현재의 규모로 계속해야 하는가?

이들 가운데 어떤 것은 兩國政府에 의해 이미 研究 혹은 交涉중인 것도 있고, 어떤 것은 美議會나 學界, 또는 韓國內의 일부 재야운동권에서 주장되는 것도 있다. 제기된 배경과 이유가 어떻든지간에 장기차원에서 韓 - 美 군사관계의 발전방향을 조명해내기 위해서는 위에 열거한 이슈를 일단 수용하여 검토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제 이러한 제반 이슈를 논의함에 있어 어떤 要因이 가장 중요하고 그같은 요인의 변화 전망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 분석되어야 한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美-蘇의 亞·太 政策의 변화내용과 아울러 그것이 韓-美 軍事關係의 장래에 어떠한 의미를 갖느냐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蘇聯 改革(Perestroika) 政策의 전략적 의미는 自國의 安保를 理念 중심의 경직된 외교정책과 軍備競爭에서의 승리라는 수단으로 달성한다는 과거의 틀을 벗어버리고, 國家利益을 적극적 平和概念으로 재편성하면서 戰爭抑止의 수단을 다양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지난날 蘇聯은 군사력 증강에만 의존한 國家安保 政策을 추진함으로써 결국 東歐와의 軍備競爭을 초래하였고, 그 결과 소극적 의미의 戰爭抑止는 달성했는지 모르나 역으로 西歐의 對蘇 同盟強化나 中國과의 갈등격화 등 相互不信만 조장시켰고 결국 국내경제 침체 및 技術的 落後를 자초하였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²⁾

이같은 蘇聯의 戰略變化는 지난 1980년대 중반이후 美國과의 軍縮協商에서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증명되었으며 東北亞 地域에 국한해 볼때도 中-蘇關係의 정상화와 아울러 韓半島 問題에 대한 蘇聯의 政策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고르바초프의 “블라디보스톡演說”과 “크라스노야르스크演說”에서 기본 윤곽이 드러난 蘇聯의 새로운 亞·太 政策構想은 中國과의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 시베리아 開發計劃에 대한 韓·日의 技術 및 資本誘致, 이 지역내의 美國 海軍力 減縮 및 既存의 美國 同盟體制 變化, 北韓에

2) M.Gorbachev, Perestroika: New Thinking for Our Country and the World(New York: Harper & Row, 1987), Part 2: Rajan Meron, “New thinking and Northeast Asian Security,” Problems of Communism, March-June, 1989, pp.4-5.

대한 군사적 영향력 강화, 우발전쟁 방지를 위한 多國間 協力關係 制度化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³⁾

고르바초프의 새로운 아시아 政策이 그동안 거둔 成果는 상당히 컸다고 할 수 있다. 우선 蘇聯은 一方的 減軍政策의 추진을 통하여 아시아 國家들에게 自國의 軍事威脅에 대한 우려를 현저하게 감소시키고 平和的 이미지를 구축하는 등 큰 성과를 올렸다. 蘇聯은 또한 中-蘇 關係의 정상화와 더불어 한반도 문제에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함으로써 명실공히 아시아의 強大國으로서 위치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다. 天安門事態 이후 國內政治적으로 심각한 緊張狀態를 유지하면서 외교적으로도 위축되어 있는 中國의 현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亞·太地域에서의 蘇聯의 외교적 영향력은 날로 증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蘇聯의 戰略變化와 대응하여 美國의 戰略的 “新思考”(New Thinking)도 현재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美國 역시 변화의 根本 背景은 國內 經濟狀況에 있다. 美國은 현재 2조6천억 달러에 달하는 外債와 매년 1천억 달러를 훨씬 상회하는 貿易 및 財政赤字에 허덕이고 있는데, 만약 이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世界 最強大國의 地位는 머지않아 무너질 수 밖에 없다는 危機意識과 아울러 과도한 軍事費 支出이 오늘날 美國 經濟危機의 主犯이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다. 經濟危機 문제에 대해 현재 美國에서는 향후 5년간 3천억 달러의 國防費를 삭감하고 이를 위해 軍備計劃을 대폭 축소하고 同盟國에 대한 기존의 책임을 줄이도록 한다는 政策方向에 대체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3) 고르바초프의 “블라디보스톡 연설” 및 “크라스노야르스크 연설” 참조.

蘇聯의 對外戰略 변화에 따른 美國內의 對蘇 인식 변화도 戰略的 “新思考”의 대두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美國의 한 輿論調查에 의하면, 美國 國民 가운데 75%는 蘇聯이 對美 核攻擊을 할 가능성이 없다고 믿고 있으며, 60%는 貿易競爭에 의한 경제위협이 蘇聯의 군사위협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이와 관련하여 國防費에 대해서도 과도한 國防費 사용이 國家經濟에 타격을 주었다는 의견이 86%, 더 이상의 國防費 支出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84%로 그 삭감을 주장하는 견해가 압도적이다.⁴⁾ 美國民 대다수는 蘇聯과의 核戰爭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고 蘇聯 고르바초프의 改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經濟, 貿易을 중시하고 國防費 增加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對內外的 變化를 바탕으로 美國은 과거의 對蘇 對決戰略에서 벗어나 新데탕트 시대에 맞는 和解政策을 지향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軍事力 보다는 經濟力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인식하에 “經濟安保”를 對外政策의 중요한 지침으로 삼고자 하고 있다. 이에 걸맞추어 美國의 군사정책도 결국 軍事資源의 한계를 인식하고 제한된 범위내에서 그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구될 것이다.

美國은 國防豫算의 효율화를 위해 高度武器의 개발과 확보에 주력하고 불요불급한 事業을 폐지하는 동시에 國內外 軍事基地를 축소하고 兵力을 감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美國 國防政策의 변화는 軍事戰略上으로는 外國에 基地와 兵力을 駐屯시키는 前進基地 戰略으로부터 공중 및 해상의 수송력 향상을 통한 遠距離 增員能力 중심으로 戰略을 전환 수립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同盟國에게는 곧 실질적 防衛公約의 약화나 防衛分擔

4) D.Yankelovich & R.Smoke, "America's New Thinking," Foreign Affairs, Vol.67, No.1(Fall 1988), pp.1-18.

증대를 택일케 하는 政策的 壓力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⁵⁾

美-蘇의 戰略的 “新思考”에 따른 정책적 변화는 韓-美 군사관계의 장래에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첫째, 全世界的 화해분위기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는 세력의 입지가 강화될 것이다.

고르바초프의 일방적 軍縮宣言과 對美協商에서 보여준 새로운 양보는 분명 인정받을 만하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韓半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이며, 구체적으로 北韓의 對南政策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해서는 아직 확신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실재하는 北韓의 軍事威脅과 세계적 평화분위기가 공존하는 불안정성이 노정될 것이다.

둘째, 美-蘇간의 新데탕트가 만들어낼 東北亞 地域의 기존 同盟體制의 질적 변화 가능성은 韓國에게 큰 짐을 줄 것이다. 특히 美國의 役割縮小과 日本의 責任增大가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이 지역에서의 힘의 再編成過程에서 韓國의 적응문제는 점차 중요성을 더해 갈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의 경우 美國과의 雙務的 同盟關係에 의해 安保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유럽에서의 NATO와 구조적인 차이가 있다. 향후 同盟關係의 질적 변화는 곧 戰爭抑止力의 주된 담당자를 美國으로부터 韓國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수반할 것이며, 그 경우 韓國은 자신의 안보를 위해 보다 많은 책임을 감당하고 동시에 日本, 中國, 蘇聯과의 關係를 잘 유지하면서 이 지역에서의 戰略的 균형을 맞춰 나가야 하는 외교적인 새로운 과제를 안 게 될 것이다.

셋째, 美-蘇간 新데탕트의 진전은 앞으로 駐韓美軍의 장래를 결정하는

5) Fred C. Ikel et al., Discriminate Deterrence: Report of the Commission on Integrated Long-Term Strategy(Jan.1988), pp.1-4.

데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만약 蘇聯極東軍과 太平洋 艦隊의 실질적 戰略減縮이 이루어지고 美國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이 지역에서 취해야 할 경우, 주한미군 문제는 초미의 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美-蘇간의 新데탕트 다음으로 韓-美 軍事關係의 장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은 韓國內에서의 反美主義 문제, 北韓의 변화 가능성, 南-北韓간의 군사적 불균형의 점진적 해소, 韓國의 對北方關係 등 韓半島로부터 생겨난 상황의 전망이다.

최근 韓國에서의 한 輿論調查 결과에 의하면, 여건이 성숙할 때까지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94.1%이고, 주한미군은 즉각 철수해야 한다고 응답한 자는 5.9%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 調查에서 응답자의 80.6%는 10년내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될 것으로 본 반면, 駐韓美軍이 2~3년내에 철수할 경우 南韓이 공산화될 것으로 보는 사람은 34%에 불과하며 주한미군의 철수후 北韓의 도발가능성을 우려한 사람도 51%에 그쳐, 기왕에 駐韓美軍의 戰爭抑止 役割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왔던 韓國 國民의 의식에 이미 상당한 변화가 나타났음을 볼 수 있다.⁶⁾ 만약 지금과 같은 추세로 南-北韓 國力隔差가 계속 심화되고 韓國과 中·蘇關係가 交流의 폭을 넓혀 간다면 주한미군을 포함하여 韓-美 軍事關係의 변화를 요구하는 韓國 國民의 숫자는 크게 증가할 것이다.

특히 韓國 政治가 계속 民主化의 길로 나아가면서 韓-美간의 군사적 결속도 과거 韓國 政治의 불안정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었던 側面이 약화되고 순수한 의미에서 戰爭抑止力로서의 역할만 남게 되며, 이와 더불어

6) 「주간조선」, 1989년 9월 17-24 일호, pp.40-43.

어 韓國의 國力과 軍事力이 상대적으로 北韓에 대해 강해질 경우에는 駐韓美軍의 존재 이유도 상실될 것이다. 또한 韓國政治의 民主化와 더불어 韓國 國民의 民族主義的 의식이 성장하면서 駐韓美軍에 대한 韓國內의 정치적 비판도 증가될 것이다. 따라서 作戰權, 龍山基地 移轉要求 등 정치적인 의미를 갖는 韓-美關係의 재조정 요구는 韓國政治의 民主化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國際的인 요인과 韓國 國內的인 요인은 대체로 韓-美 軍事關係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증가될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北韓의 變化展望이라는 문제에 이르면 韓-美 軍事同盟 關係의 변화를 어렵게 만드는 비관적 요인이 아직까지는 지배하고 있다.

韓-美간의 팀스피리트訓練을 이유로 최근 北韓은 또다시 南北對話를 전면 중단하였고, 이미 計劃된 學術行事에의 참가를 취소하고 美國學者들의 平壤訪問을 일방적으로 연기하였다. 1989년도 英國 戰略問題研究所(IISS)의 『軍事力 均衡(Military Balance)』에 의하면 北韓은 최근 地上軍을 1백만 수준으로 증가시켰고⁷⁾ 蘇聯은 MiG-29 14대, Su-25 28대, SAM-5 18대 등 最新銳武器를 北韓에 제공했다. 北韓은 또 韓國에 대하여 反體制人士 등을 중심으로 秘密 訪北을 유도하는 政治工作을 지속하였고, 南北對話에서도 林秀卿양, 徐敬元의원의 구속문제에 대한 비난으로 일관하였다.

1990년 3월 3일에 발견된 東部戰線의 제4호 땅굴은 韓國은 물론 전 세계 국민을 놀라게 하였다.

北韓의 對南政策 變化與否가 韓-美 軍事關係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적 요인이 된다는 차원에서 보면 韓-美 군사관계 변화추구에 있어 보다 신

7) IISS, Military Balance 1989-1990 (London: IISS, 1989)

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다.

駐韓美軍의 장래를 논하려면, 駐韓美軍이 韓半島의 戰爭抑止와 平和에 어떠한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고 동시에 그 부정적 측면이 있다면 무엇인가, 또 駐韓美軍의 감축이 韓半島 平和와 安定에 줄 수 있는 득은 무엇이며 失은 무엇인가 등에 대한 검토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駐韓美軍이 韓半島의 平和維持에 기여하는 군사적 측면은 戰爭時 自動介入을 보장하는 인계선(Tripwire)으로서의 戰爭抑止 役割이 가장 중요하다. 그밖에 駐韓美軍은 韓國軍의 취약 부분을 보강해 주는 戰鬥力으로서의 기능과 東北亞 地域에서의 核擴散을 억지하고 南-北韓간의 소규모 충돌이 전면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줄이는 역할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駐韓美軍은 北韓에 대한 韓國의 軍事的 不均衡을 보완해 주는 기능 외에도 南-北韓간에 尖銳한 이념갈등이 촉발시킬 수도 있는 擴戰의 완충제적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다.

駐韓美軍은 또 東北亞地域의 戰略 次元에서 韓半島 유사시 中·蘇의 韓半島 개입을 제한하는 戰略的인 均衡者(Balancer)로서의 역할도 가지고 있다. 政治·經濟·心理的 次元에서 보면, 駐韓美軍은 韓國의 政治·社會的 안정을 보장해 줌으로써 韓國의 정치적 불안정이 외부의 군사 침략을 유발할 가능성을 억제해 주고, 韓國이 經濟成長을 지속할 수 있는 적절한 軍事費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며, 韓國 國民의 심리적 안정을 보장해 주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같은 긍정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駐韓美軍은 北韓으로 하여금 정치공세의 구실이 되고 있으며, 때로는 韓國國民의 자긍심과 자존심에 타격을 주는 경우도 있는 등 부정적 측면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駐韓美軍은 또 韓國을 군사적으로 美國과 연결시킴으로써 中·蘇의 對北韓 軍事支

援을 정당화하고, 北韓과 蘇聯의 軍事密着에 대해 명분을 제공할 뿐 아니라 韓半島 문제의 國際化를 유도하는 측면도 있다.⁸⁾

그렇다면 주한미군을 감군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對北 戰爭抑止의 공백을 무엇으로 메꿀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韓國 스스로 戰力增強을 통하여 北韓에 대한 단독적 억지력을 갖추려면 앞으로 상당기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현재 韓國 政府의 판단이다. 그렇다고 이 기간 동안 日本이 힘의 공백을 메꿀 수도 없고, 韓-中, 韓-蘇간에 실질적인 전쟁억지를 달성할 수 있는 平和保障體制도 아직은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다음의 문제는 駐韓美軍의 감군으로 생겨나는 추가적인 軍事費 부담을 아직 韓國은 감당할 능력이 없고, 韓國의 政治·社會的 안정에 주한미군이 공헌한 기능을 간과할 수도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駐韓美軍이 감축되면 어떠한 득이 있을 수 있는가? 만약 그렇게 되는 경우 韓國의 反美主張 勢力이나 北韓의 對南 政治攻勢의 立地가 꺾 약화될 수 있을 것이고, 美國內의 減軍 주장자들의 논의도 과격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우선 예상할 수 있다. 또 駐韓美軍과 관련한 韓-美간의 政治論爭이 약화되고, 中·蘇에 대한 韓國의 외교적 입장이 강화될 가능성도 있으며 동시에 韓國과 社會主義諸國과의 관계 진전에도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駐韓美軍의 장래를 판단할 때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은 ① 減軍問題를 長期的이고 포괄적인 계획으로 다루어야만 건설적인 협의와 기획이 가능하다는 점 ② 減軍問題를 南-北韓

8) Young-koo Cha, "The ROK-U.S. Military Alliance in the Year 2000", Presented at the First ROK/US Defense Forum, KIDA, Seoul, December 13-14, 1988.

政治・軍事關係의 發展 및 北韓의 對南政策 變化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 ③ 단순히 軍事次元에서만 보지 말고 政治・外交・經濟・社會的 影響 등을 고려한 다차원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 ④ 韓・美가 조용하면서도 충분하고 긴밀하게 협의한 후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韓半島의 전쟁 억지기능을 절대로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에서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 ⑤ 부분적 감축의 실시 시기를 지나치게 늦게 잡으면 이 문제가 兩國의 議會에 넘어가 정치쟁점화됨으로써 건전한 방향으로의 점진적 變化를 오히려 그르칠 수 있다는 점 ⑥ 美・蘇를 포함한 強大國들의 韓半島 平和保障體制 구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駐韓美軍의 장래에 관한 兩國間의 진지한 協議時期는 1990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으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선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第1案은 1991년부터 2000년까지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北韓과 무관하게 주한미군의 병력을 점진적으로 감축하는 것이다. 이는 문제를 조기에 매듭지을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減縮決定을 南北關係改善에 활용하지 못하고 감축의 시기가 너무 빨라 전쟁억지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으며 軍事的으로 준비할 시간도 적다는 문제점이 있다.

第2案은 주한미군 감축을 1992 - 96년까지의 1차 5개년 계획과 97년 - 2001년까지의 2차 5개년 계획으로 나누어 추진하되, 1차 계획은 北韓과 무관하게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2차 계획은 南 - 北韓關係의 진전과 北韓의 확실한 對南戰略變化가 있는 것을 조건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 案은 韓・美 兩國의 현재의 국내사정을 감안할 때 駐韓美軍의 감축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한

방안이다.

이 方案은 구체적으로 1991년까지 韓-美 聯合指導體制 변화, 減軍計劃 등을 포함한 5개년 계획을 韓·美 양국이 공동으로 수립하여, 이를 기반으로 1차 5개년 계획기간 동안 주한미군 가운데 일정규모를 北韓과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감축하고, 2차 5개년 계획은 北韓側의 태도를 보아 駐韓美軍의 最終 殘留狀態를 추후 결정하여 추진한다는 것이다.

1990년은 韓-美 군사관계의 質的變化를 요구하는 1990년대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美國 政府는 년·워너 수정안의 요구사항인 韓國과의 협상결과를 1990년 4월 1일까지 議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美國務省이 議會에 보고할 내용으로는 中·蘇의 변화를 포함한 東北亞의 군사정세, 주한미군의 전력구조 및 임무재조정 방향, 한국의 추가적 비용분담 내용, 美8軍의 人員 및 施設의 재조정 방향, 指揮體系 문제, 東北亞의 信賴構築方案 등 韓-美 군사관계 변화라는 면에서 본질적인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¹⁰⁾ 이는 어느 것 하나도 간단히 답을 얻기 어려운 사안이다.

北韓의 對南政策에 아직도 변화의 징후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고, 美·日·中·蘇등 4大 強國의 이해가 여전히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韓國의 지정학적 여건하에서 美國의 일방적 軍事役割 縮小는 자칫 韓半島의 불안정을 수반하게 될 위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天安門 事態 이후 中國의 정치정세와 1991년으로 계약 종료되는 美國 필리핀 基地의 展望이 불투명하며, 中國을 포함한 아세안(ASEAN), 韓國 등 어느 나라도 日本의 軍事大國化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日本이 아시아 지역에서 군사역할을 급격히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기는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9) 日本 防衛廳, 『防衛白書 昭和25年』등 參照.

10) 「동아일보」, 1989년 8월 1일자.

Ⅲ. 韓 - 蘇關係와 蘇聯의 對韓政策

1980年代 후반 들어 전세계적인 新데탕트의 擴散과 더불어 韓國의 北方政策이 가시화되면서 韓 - 蘇關係가 크게 進展되고 있다.

1983年 9月 大韓航空(KAL) 007기의 격추사건 이후 급속히 냉각되어 “傳統的인 敵對關係”로 회귀하였던 兩國 關係는 88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크게 회복되어, 1988年 8월에 올림픽 기간중 領事業務를 위해 蘇聯 領事團의 서울 파견을 내용으로 하는 口上書(Verbal Note)가 체결되었고, 1988年 12월에 大韓貿易振興公社(KOTRA)와 蘇聯 聯邦商工會議所 간에 貿易事務所 交換開設을 위한 通商協助約定이 체결되었으며, 1989年 12월에 양국 정부간에 領事處(Consular Department)의 相互 開設을 위한 합의의정서가 체결되었다.

이같은 관계발전에 대해 崔浩中 韓國外務長官은 1989年 6월에 통상대표부 수준의 兩國關係가 조만간 수립될 것이라고 전망했고, 1990年 2月에는 KBS放送과의 회견을 통해 韓半島 緊張緩和와 公式 外交關係 樹立을 위한 外務長官會談을 蘇聯에 대해 제의하였으며, 이에 대해 게라시모프 蘇聯外務部 代辯人도 “유엔에서의 對話 可能性”을 시사함으로써 이제는 韓 - 蘇間에 公式 國交樹立도 머잖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 되었다.¹¹⁾

韓 - 蘇關係의 展開過程을 살펴볼 때 물론 88 서울올림픽의 기여가 대단한 것은 사실이지만, 韓 - 蘇 兩國의 지정학적 입장이나 경제적 여건의 상호보완성 등을 고려해 본다면 양국간의 교류는 불가피한 것이었다고도 할

11) 「중앙일보」, 1989年 6月 20日 : 「한국일보」, 1990年 2月 16日 : 「동아일보」, 1990年 2月 20日.

수 있다. 먼저 직접적 이유로는, 韓國으로서 近距離에 위치한 시베리아 지방의 豊富한 原資材와 에너지資源을 이용하고 輕工業 生産品을 판매하기 위한 市場으로서 蘇聯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 蘇聯 역시 시베리아 地方의 資源을 開發하여 限界狀況에 처해 있는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할 뿐더러 生必需品를 포함한 전반적인 消費財 不足現狀을 打開하기 위해 韓國과의 經濟協力이 절실한 형편이기 때문이다. 또한 간접적 이유로는, 蘇聯의 방대한 영토가 갖는 輸送면에서의 便利 圖謀를 들 수 있는데, 韓國에게 蘇聯 시베리아鐵道나 領空 通過를 통한 對유럽 輸出入은 費用·時間의 양면에서 매우 유용한 것이다.

지난 1970年代에 전개되었던 부분적인 韓-蘇交流는 접어두고라도¹²⁾, 1984年6월에 蘇聯과의 교류가 부분적으로 재개되어 그해 8월에 韓國의 지질학자가 모스크바에서 열린 國際學術會議에 참석한 이래, 양국간의 非公式的인 人的·物的 交流는 88 올림픽 이전에도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蘇聯 극동의 나훗카를 통하여 韓國의 대유럽 수출물자가 중개되었고, 蘇聯의 원목과 무연탄이 부산으로 직송되었다. <表>는 韓-蘇간 經濟交流 상황을 정리한 것으로, 1987년에 벌써 交易規模가 1億5千萬 달러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表에서도 알 수 있듯 88 올림픽 이후에 韓-蘇 經濟交流는 더욱 급속히 伸張되었다. 특히 1988~89년 기간 동안 과거 1,2천만 달러에 머물고 있던 韓國의 對蘇 輸出은 무려 8배 가까이 늘었고, 輸入額

12) 1973年6월에 당시 朴正熙大統領은 “平和統一 外交政策 發表”(이른바 6.23 선언)를 통하여 상호 平等의 原則下에 모든 國家에 문호를 개방한다는 입장을 公式的으로 표명하였고, 이에 즈음하여 韓國의 연극인이 國際會議 參席을 위해 최초로 모스크바에 간 것을 필두로 양국간의 비공식적 교류는 상당수준 展開되었다.

<表>

韓國의 對蘇 貿易推移 (1984 ~ 1989)

(단위 : 백만달러)

年 度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輸 出	3.4	16.2	12.5	17.4	26.0	207.7
輸 入	41.5	42.2	67.8	133.1	178.3	391.7
交 易 額	44.9	58.4	80.3	150.5	204.3	599.4
貿 易 收 支	△ 38.1	△ 26.0	△ 55.3	△ 115.7	△ 152.3	△ 184.0

(出處 : 관세청 및 외무부 집계자료)

도 2 배 가까이 늘어 총 交易規模가 6 億달러 수준이 되었다.¹³⁾

88 올림픽은 또한 韓 - 蘇間의 人的 交流를 증대시켜 주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올림픽 기간동안 약 1천명에 이르는 蘇聯의 체육인 또는 경기 관람객이 韓國을 방문했고, 올림픽기념 문화행사 참가를 위해 蘇聯의 불쇼이합창단과 모스크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불쇼이발레단 등의 내한이 잇따랐다.

또한 88 올림픽을 전후하여 兩國 主要 人士들간의 相互 訪問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먼저 정치 - 학술 분야에서는 1988년 5월말에 蘇聯 동양학연구소의 와시리에비치 부소장 일행이 방한했고, 그해 9월에는 극동연구소의 티타렌코 소장이, 12월에는 동양학연구소의 게오르기 김 부소장이 訪韓했다. 1989년에 들어서도 그 趨勢는 이어져 7월에 世界經濟 및 國際關係 研究所의 코롤료프 부소장 일행이 방한하고 9월에는 전외무차관인 동양학연구소의 카피차 소장과 미·캐나다연구소의 아르바토프 소장이 방한하는 등

13) 1989年 交易規模의 大幅의 擴大는 蘇聯의 계속된 경제침체에 따른 生必需品 緊急輸入措置에 크게 힘입은 것이며, 蘇聯으로부터의 原資材 및 에너지資源 導入도 계속 증대되었다.

蘇聯 정책브레인들의 來韓이 줄지어 있었다. 韓國에서도 1988年 8월에 朴哲彥 大統領 政策補佐官이 蘇聯을 비공식 방문하여 고르바초프 당서기장에게 노태우 大統領의 親書를 전달하였다고 보도되었으며¹⁴⁾, 1989년 6월에는 野黨인 統一民主黨의 金泳三 總裁가 蘇聯을 訪問하였다. 經濟 分野에서는 1988년 10월에 蘇聯 聯邦商工會議所의 골라노프 수석부회장이 訪韓하여 貿易事務所 開設에 合意했고, 1989년 1월에는 全國經濟人聯合會의 鄭周永 前會長이 訪蘇하여 韓-蘇 民間經濟委員會를 結成하였다.

결국 88 올림픽은 韓-蘇간에 그간 存在하였던 일종의 터부를 깨어내는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韓國은 “韓半島 分斷의 元兇”이나 “韓國 戰爭 挑發의 背後 操縱者”로 보이왔던 蘇聯을 단순한 軍事強國에서 體育·文化大國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蘇聯도 “美國의 꼭두각시”로 보았던 韓國을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사실상(de facto) 定式國家로 인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최근 들어 거듭 천명되어온 蘇聯의 韓國關係 발언은 이같은 변화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1988년 5월에 蘇聯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의 프리마코프 소장은 “韓國과의 經濟交流 意思”를 처음으로 밝혔고, 같은해 8월에는 동양학연구소의 티호미로프 국제관계 상호문제부장이 “서울올림픽 이후 蘇聯은 政經을 分離하여 韓國과의 經濟交流를 強化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9월에는 극동연구소의 티타렌코 소장이 “蘇聯 極東開發에 대한 韓國의 參與를 提議”하기도 하였다.

이같은 견해들을 바탕으로 고르바초프는 1988년 9월 16일에 행한 “크라

14) 「중앙일보」, 1988年 12月 29日.

스노야르스크 演說”에서 “韓半島의 諸般 狀況이 好轉됨에 따라 앞으로 韓國과 經濟關係를 가질 可能性이 열려 있다”고 말하였고, 10월에는 게라시모프 蘇聯外務部 代辯人이 “貿易事務所 開設 論議는 經濟的 要因으로서 韓國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요컨대, 韓國의 경제적 실체에 대한 분명한 인식은 현재 蘇聯 對韓政策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韓-蘇 經濟關係가 계속 발전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으로 대두하고 있다.¹⁵⁾

그런데, 이같은 蘇聯 對韓政策의 變化는 과연 一時的 내지 現狀의 인가, 아니면 蘇聯 外交政策의 本質的 變化에서 起因한 것인가? 구체적으로 蘇聯 對韓政策 變化가 갖는 安保·軍事的 意味는 무엇이며, 蘇聯은 韓國과의 經濟關係 深化와 北韓과의 政治·軍事的 同盟關係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는 곧 韓-蘇關係의 發展限界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되는 것으로 보다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전통적으로, 蘇聯은 동아시아에서 自國의 勢力擴張을 목표로 하는 현상파적 국가로 인식되어 왔다.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유럽 국가로서 17세기 이후의 東進政策의 결과 1860년에야 연해주지방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흑한의 불모지인 시베리아를 배후지로 하는 極東地方은 “自生力”이 부족한

15) 실제로 현재 韓國의 經濟界에서는 1989년이 탐색의 시기였다면 이제는 본格的인 대소 진출의 시기라고 보고 있다. 韓國의 主要 大企業들은 競爭的으로 모스크바와 나훗카 등지에 지사를 설치하고 있으며, 시베리아 山林開發事業을 비롯해 PC 組立工場, 방직·縫製工場, 신발공장 등 合作生産工場과 호텔·백화점, 무역센터, 아파트 건설 등을 적극 推進하고 있다. 「韓國經濟新聞」, 1990年2月14日. 韓國의 대표적인 企業人인 현대그룹 정주영(鄭周永) 명예회장의 비슷한 주장은 「월간조선」, 1990年3月號, pp. 190-204 參照.

지역이었고 러시아와 그 뒤의 蘇聯政府는 南進政策을 통해 이를 보완하려 하였던 것이며, 이에 이 지역의 주요 세력으로서 日本, 美國, 中國 등의 勢力을 弱화시키기 위한 爭奪戰을 차례로 벌이게 되었던 것이다.

1970년대에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던 蘇聯 極東軍事力의 강화는 이같은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蘇聯은 極東軍을 증강함으로써 이 지역의 安保를 補強함과 아울러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政治的 영향력을 확보하려 하였던 것이며, 이는 결국 이에 대응하는 美-日-中의 戰略的 同盟關係를 유발함으로써 실패에 돌아가고 말았다.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 蘇聯의 東北亞政策은 이같은 과거의 戰略에서 크게 변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고르바초프는 86년 2월에 열린 蘇聯共產黨 제 27차 全黨大會에서 “蘇聯은 亞-太地域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最高指導者로서는 처음 언급하였고, 이어 그해 4월에 蘇聯政府는 “亞·太地域의 協力擴大措置에 관한 聲明”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고르바초프는 1986년 7월 28일의 “블라디보스톡 演說”에서 自國이, “아시아國家”임을 다시 천명하고 極東시베리아地域의 획기적 발전을 약속하였으며, 이와 아울러 地域的 調整의 問題라든가 非核化, 海軍 行動의 統制, 아시아에 있어서의 通常兵力의 削減, 信賴構築措置(CBM) 問題 등과 특히 中國과의 關係改善 協議 및 “3大 障礙” 문제에 대한 讓步 用意를 천명하였다.

이에 따라 蘇聯政府는 1987년 8월에 총투자규모 2,320억루블(약 3,700억 달러)의 “長期極東經濟發展計劃”을 수립했고, 1988년 3월에는 亞·太國家와의 經濟協力 增進을 목표로 “亞·太國家 經濟協力委員會”를 設置하

였으며, 같은달 아시아개발은행(ADB) 가입의사를 표명하게 되었다.¹⁶⁾

고르바초프는 앞서 언급한 1988년 9월 16일의 “크라스노야르스크 演說”에서 구체적인 “아시아地域 緊張緩和 措置”로서, 亞·太地域에서의 核武器凍結에 대한 協議 開催, 南-北韓-蘇-中-日 등의 海·空軍力の 凍結 및 減縮을 위한 協商, 駐필리핀 美軍基地와 駐베트남 蘇聯基地의 相互 撤收, 亞·太地域 公海와 그 上空에서의 事故防止를 위한 多國간 協의, 印度洋의 平和地域化를 위한 國際會議 開催, 亞·太地域 安全保障提案 檢討를 위한 美·蘇·中 交渉機構 設치 등 7개항을 제시하였다.

蘇聯은 “크라스노야르스크 演說” 직후인 그 해 9월 18일에 블라디보스톡을 포함한 極東 프리모스키(연해주) 지역을 개방하였고, 10월에는 블라디보스톡에서 太平洋經濟協議會(PECC) 國家들을 초청하여 “國際經濟協力會議”을 개최하였으며, 1989년 9월에는 極東 경제특구로서 나훗카항을 지정하였다.

요컨대 蘇聯의 새로운 東北亞政策은 두 가지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 그 하나는 極東시베리아 개발과 이를 위한 韓·日 등 東北亞 國家들과의 經濟協力 모색이며, 다른 하나는 이를 위한 國際的 環境造成 내지 蘇聯의 新思考 外交政策의 한 부분으로서 이 지역에서의 구체적인 緊張緩和 追求이다. 특히 두번째의 목표는 과거에 中國과의 雙務的인 協商이나 緊張緩和를 위한 “全아시아會議” 開催 등 다변적인 협상 제의로 추진되어 왔는데, 고르바초프가 1988년 12월 8일의 유엔總會 演說에서 “一方的 軍縮”을

16) 1987年 8월에 蘇聯外務部가 중래의 日本과(課)를 부(部)로 승격시킨 것은 이같은 亞·太地域 중시 외교정책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サンケイ新聞」, 1987年 8月 15日.

선언한 이후에는 이에 더하여 蘇聯의 獨自的인 軍事力 減縮措置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시아에서의 蘇聯의 一方的 軍縮措置의 核心은 中國과의 國境에 배치된 地上 軍事力과 蘇聯 太平洋艦隊의 減縮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蘇聯은 地上軍 兵力 20萬名과 空軍 11개 연대 및 海軍함정 16척의 減縮計劃을 발표하고 이를 실행중에 있다. 1989년 들어서는 中國과 보다 포괄적인 “國境非武裝化” 協商을 추진하고 있어 極東軍의 地上兵力 減縮은 이제 더욱 철저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처럼 두 차원에서 전개되는 蘇聯의 東北亞政策은 後者の 緊張緩和措置의 “眞實性” 면에서 주변국가들로부터 그간 의구심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며, 그 결과 前者의 極東開發 目標가 여전히 未達成된 채로 남아 있다. 蘇聯의 緊張緩和 政策은 구체적으로는 中國과의 關係正常化 및 韓國과의 부분적 關係改善 정도 이외에는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며, 美國의 아시아정책 전문가들은 蘇聯에 대해 北韓 및 베트남과의 軍事的 密着關係 解消나 북방열도의 對日 返還 등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¹⁷⁾ 또한, 太平洋艦隊를 비롯한 蘇聯의 海·空軍力의 減縮措置가 이미 廢棄處分 段階에 있는 戰艦이나 戰術機들을 대량으로 감축하고 그 대신 戰鬪効率이 높은 新武器를 配置함으로써, 전체적인 수량을 줄이는 데에 급급하다고 보고 있

17) 이같은 “입장료” 要求는 1988年 10월에 美國務省의 시거 차관보 등이 주장한 것이며, 1989年 9월의 웨일 美副統領의 아시아순방 기간에도 제시되었다.

다.¹⁸⁾

이에 대해 蘇聯은 1989년 말부터 베트남의 캄란만에 있는 海·空軍力を 減縮함으로써 信賴를 회복하려 하고 있다. 蘇聯은 과거 美軍의 상응한 감축이 없는 한 캄란만에서 蘇聯軍을 감축하지 않겠다던 종래의 정책을 수정하여,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라 5 - 6대의 항공기로 구성되는 1개 항공편대만을 남기고 미그 23기와 TU-16 전폭기 등을 철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이같은 조치는 특히 필리핀을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과 기타 주변국가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다.¹⁹⁾

그러나 이같은 조치가 蘇聯과 東北亞 國家들과의 關係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에는 아직 미흡하며, 蘇聯은 日本과의 關係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정책적 시도를 추진중인 것으로 보인다. 1990년 1월에 도쿄(東京)의 한 蘇聯 소식통은 蘇聯이 亞·太地域의 緊張緩和를 위해 日本과 협상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²⁰⁾ 또한 최근 蘇聯의 게라시모프 外務部代辯人도 蘇聯 정부내에서 쿠릴열도의 對日 返還問題가 논의되고 있으며, 改革派인 엘친은 “5年內에 返還”할 것을 주장했다고 말하였다.²¹⁾ 蘇聯의 새

18) 1989年 5월에 日本 防衛廳은 蘇聯의 極東軍事力 減縮發表에 대해 極東軍의 범위에서 중앙아시아 및 시베리아 군관부를 제외시킨 나머지만 발표한 점과 極東軍을 美·日 대항용과 중국 대항용으로 區分한 점 등을 指摘하였고, 세부적으로도 지상군의 경우는 병력 및 장비의 充足率이 저조한 사단을 해체하고 항공기는 노후화된 미그 21 및 23 戰鬥機를 廢棄하며 함정은 최근 수년간 노후함 수십척을 廢艦하는 경우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양적 감축을 통한 재편과 合理化의 촉진으로 전력이 현대화할 可能性이 있다는 評價를 내놓고 있다.

19) 「サンケイ新聞」, 1990年 1月 11日 : 「조선일보」, 1990年 2月 12日.

20) 이 소식통은 “亞·太地域의 政治軍事的 狀況이 양국 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며, 이는 “極東에서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는 데 有益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동아일보」, 1990年 3月 13日.

21) 「한국경제신문」, 1990年 2月 20日.

로운 對아시아 적극 조치가 이제는 日本을 대상으로 추진될 것이며, 蘇聯은 1991년으로 예정된 고르바초프의 日本訪問 이전에 “北方 4個 島嶼의 返還” 등의 일방적 양보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되고 있다.

그렇다면 韓半島 문제에 국한하여 蘇聯의 外交·安保政策 변화는 어떠한가? 韓國 상황과 특히 韓-美 軍事關係에 대한 蘇聯의 인식은 무엇이며, 蘇聯은 과연 北韓의 개방과 민주화를 위한 강력한 압력행사 등 보다 적극적으로 韓半島에서의 緊張緩和를 추구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

이같은 물음에 대해 蘇聯의 태도는 이중적이며, 아직 유보적인 것이다. 蘇聯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군사·외교적으로는 北韓과의 同盟關係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는 韓國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蘇聯은 “韓國이라는 經濟的 實體”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한편으로, 北韓에 대해 미그 29 戰鬥機나 SA-5 지대공미사일 등 첨단무기를 제공하고 있고, “韓半島 非核地帶化”나 “韓國 障壁”(Korean Barrier) 등 첨예한 이슈에 대해서는 北韓의 입장을 여전히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駐韓美軍에 대해서도 “이제 東北亞에서의 中·蘇의 安保威脅은 상당부분 사라진 만큼 駐韓美軍은 撤收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²²⁾

蘇聯은 韓半島, 더 나아가 東北亞 緊張緩和의 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北韓의 軍事挑發 可能性을 최대한 억지하면서, “시간을 벌며” 서서히 北韓에 대해 開放壓力을 행사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22) 고르바초프의 “블라디보스톡 연설”, 1990年 2月 세바르드나제 외무장관의 기자회견. 「한겨레신문사」, 1990年 2月 11日 : 1989年 11月 世界經濟 및 國際關係研究所의 마르티노프소장 회견. 「조선일보」, 1989年 11月 24日 등 參照.

렇게 볼 때, 蘇聯의 對北韓 軍事均衡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北韓의 입장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도 北韓을 고립시키지 않으려는 배려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蘇聯은 동유럽 및 몽고, 베트남 등에서의 전반적인 體制 變化에서 필연적으로 “北韓의 變化”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아마도 그 段階까지는 蘇聯의 韓半島 정책은 다소 유보적이고, 政治와 經濟를 분리한다는 원칙하에 전개될 것이다. 물론 “北韓의 變化”가 전혀 가시화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蘇聯이 정책을 바꾸어 “韓國에 대한 獨自的 承認”이나 “韓國의 UN 單獨加入 支持” 등으로 北韓에 대한 壓力을 強化시키려는 노력을 강화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²³⁾

韓-蘇關係의 發展 可能性도 이같은 蘇聯의 對韓政策 變化에 대응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물론 韓國의 경제계에서는 極東시베리아 진출이 또 하나의 “프런티어”라는 希望的 견해를 피력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본격적인 韓-蘇 經濟協力이 불원간 이루어질 것이지만, 韓半島의 平和定着과 이를 위해 “北韓의 變化”를 끌어내려는 노력은 여전히 또 하나의 課題인 것이다.

23) 序頭に 기술한 소련 世界經濟 및 國際關係研究所 크나제박사의 주장은 이같은 급격한 변화를 念頭에 두고 이루어진 것이나, “조만간의 韓-蘇 수교”나 “北韓의 피침시에만 蘇-北韓 상호원조조약을 준수한다”는 등의 주장은 아직은 확립된 蘇聯의 정책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세계일보」, 1990年 2月 13日.

Ⅳ. 韓半島 平和保障을 위한 우리의 課題

2차대전 이후 유럽지역의 평화는 美·蘇에 의해 유지되어 온 WTO와 NATO 라는 2개의 集團安全保障體制를 근간으로 한 核의 均衡에 의하여 유지되어 왔으나, 오늘날에는 新데탕트體制가 진전되면서 美·蘇의 役割이 감소되어 美-西유럽 國家들간의 地域安保體制에 의한 安定維持로 그 軸이 바뀌어지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亞·太地域의 安定은 軍事的 超強大國인 蘇聯의 팽창을 美國이 兩者的 軍事同盟體制로 억제하여 美-蘇의 軍事的 對峙에 아시아 國家들이 개별국가별로 冷戰體制에 참여하는 형태로 유지되어 왔다. 즉 지난날 軍事的으로 “堅固한” 兩國體制(tight bipolar system)가 “느슨한”(loose) 형태로 전환되면서 地域的 強國(regional power)의 역할이 확대되고 東-西陣營간의 相互依存(interdependence)이 불가피하게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韓半島次元에서 보면 韓-蘇關係가 政治·外交·經濟的 領域에서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가운데 기왕의 韓-美關係에 있어서도 성격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美-蘇의 新데탕트體制가 가장 중요한 촉진적 역할을 하였다고 본다. 이렇게 보면 향후 韓半島의 平和와 安定은 美·蘇가 均衡者로서의 기능을 얼마나 충실히 수행하느냐에 크게 左右되며, 한편으로는 기왕의 韓-美 軍事同盟, 北-蘇 軍事同盟을 기반으로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韓-蘇간의 交流增進, 外交關係 樹立 등을 추진하고 北-美간에도 이와 상응한 관계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韓半島의 平和保障은 한층 강화될 것이다.

韓-蘇關係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거론되는 이슈들은 ① 南-

北韓關係의 對峙持續 ② 韓-美軍事關係 등 韓國의 安保體制 ③ 北-蘇 軍事同盟關係 등이라고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韓-蘇關係의 進展을 促進시키는 要因들은 ① 美-蘇간의 新데탕트 ② 韓-蘇간의 엄청난 經濟的 共同利益 開發 可能性 ③ 冷戰的 軍事體制의 弱화 ④ 韓半島 및 東北亞의 平和定着에 대한 周邊 強大國들의 共通利害 增進 등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軍事的 문제들은 韓-蘇간에 상당한 見解差異를 노정시켰던 부분이다. 蘇聯은 駐韓美軍의 撤收, 팀스피리트 訓練中止, 北韓 軍事力의 對南 優位 不認定, 韓-美-日 軍事同盟 可能性 비난 등 그동안 北韓의 主張을 대체로 支持하는 입장을 늘 취해 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蘇聯은 北韓에 대해 상당량 武器의 無償 혹은 저가의 供給, 北韓의 對南 武力統一政策에 대한 默認, 北-蘇간의 聯合軍事訓練 실시, 北韓의 核開發 能力 蓄積에 대한 默認, 北韓內의 世襲體制 默認, 韓國內 콘크리트障壁에 대한 言及 등 超 強大國으로서 北韓에 대해 확실한 외교적 立場표명이 부족하였다.

韓半島에서의 戰爭은 南·北韓은 물론 美·蘇 어느 나라에게도 바람직스럽지 않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유럽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韓半島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그것은 고르바초프의 “新思考”가 韓半島 문제해결에도 돌파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過去의 思考(Old thinking)에 의하면 韓-美 軍事關係는 곧 蘇聯에 위협이 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해석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條件이 存在해야 한다.

- ① 韓-美 軍事同盟이 反蘇(anti-Soviet)를 目標로 할 때
- ② 韓國이 武力統一政策을 追求할 때
- ③ 韓·蘇가 極度の 軍事的 敵對關係를 가지고 있을 때
- ④ 蘇聯이 韓半島의 安定을 바라지 않을 때

- ⑤ 蘇聯이 北韓의 武力赤化統一을 支持할 때
- ⑥ 韓·蘇가 共通의 利益을 갖지 못할 때
- ⑦ 美·蘇가 경직된 對決構造下에 있을 때 등이다.

그러나 지난 몇년간의 世界的 變化는 위의 조건들의 어느 것도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였다고 본다. 1990년대 韓-美 軍事關係는 韓半島의 緊張을 緩和하고 平和定着을 促進시키는 方向으로 추진될 것이다. 이제 美國과 蘇聯, 韓國이 더불어 할 과제는 北韓의 民主改革을 유도하고 北韓을 安定과 平和를 追求하는 나라로 變化시키는 것이다.

새로운 韓·蘇關係 發展에 대한

美·日의 視角

文 首 彦
(崇 實 大)

目 次

I. 韓・蘇關係의 政治的 합의	75
II. 韓・蘇關係에 대한 美國의 시각	78
III. 韓半島周邊의 變化하는 國際環境	82
IV. 韓・蘇關係에 대한 日本의 視角	89
V. 結 論	91

韓國의 '北方政策' 과 蘇聯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이 맞물려 推進되면서 韓·蘇間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어오고 있다. 일찍이 韓國에 대한 蘇聯의 관심은 지난 1986년 7월 고르바초프의 블라디보스톡 宣言에서 다음과 같이 표출된 바 있다.

“韓半島의 危險스러운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한국 人民이 民族問題를 해결하기 위한 길로 들어서는 것도 可能합니다.”

이후 1988년 9월 고르바초프는 크라스노야르스크 宣言을 통해 經濟協力の 파트너로서 韓國을 직접적으로 言及하였다. 이를 계기로 40여년 동안 存在했던 '無狀態' (Zero-State)로부터 脫皮, 經濟分野뿐만 아니라 文化 및 學術的 분야에 이르기까지 雙方間的 交流와 會談이 擴大되었다.¹⁾ 최근 蘇聯을 방문한 韓國의 김영삼씨와 고르바초프 蘇聯大統領의 만남은 아직까지 外交關係를 가지고 있지 않은 韓·蘇 兩國關係의 실질적인 發展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北韓의 반대를 비롯한 몇가지 障礙에도 불구하고 韓國과 外交關係를 수립하고자 하는 고르바초프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²⁾

改善되고 있는 韓·蘇關係는 이미 相互認識에 대한 점진적인 變化에서

1) 현대, 삼성, 럭키금성, 대우 등 韓國의 主要 大企業들은 重要事業프로젝트의 하나로서 시베리아 및 蘇聯極東地域에서의 天然資源 開發을 추진하고 있다. 양국간의 貿易量은 지난해 5億9千9百40萬달러를 記錄, 3년 동안 430%의 增加趨勢를 보였다.

2) 야코블레프, 뿌리마코프를 비롯한 蘇聯政治指導者들과 김영삼씨 사이에 兩國關係 정상화, 經濟協力の 촉진방안, 韓國의 UN加入, 東아시아에서 平和를 구축하고 韓半島에서 緊張을 緩和하는 방식 등 상호관심사에 대한 폭넓은 意見 交換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韓國記者와 가진 한 인터뷰에서 야코블레프는 “韓·蘇關係 正常化 과정에서 주요 장애는 없다”고 밝혔다. Korea Herald, March 23, 1990.

연유된 것이며 이는 또한 政府의 政策에 심오한 影響을 미치고 있다. 다시 말하여 第2次 世界大戰 이후 美國과 蘇聯 사이의 이데올로기적 對立 때문에 분단되었던 韓半島를 둘러싼 國際政治秩序에 있어서 점진적인 變化가 발생함을 意味한다. 이러한 側面에서 韓·蘇 雙方關係의 추이는 東아시아의 國際政治 構造에 중대한 影響力을 행사하고 있다.

한편 美國은 수십년동안 東아시아 地域의 형성과 발전에 밀접하게 關聯을 맺어왔기 때문에 이 地域의 變化狀況에 무관심한 방관자로 남아 있지 않는 것이다. 東아시아의 또하나의 거대세력인 日本 역시 본질적으로 이웃나라, 즉 韓·蘇關係의 새로운 發展에 대해 매우 민감한 편이다.

이같이 韓·蘇關係의 發展에 대한 美國과 日本의 시각을 살펴보는 것이 바로 이 글의 目的이다. 이를 위해서는 물론 美·蘇關係에서 變化된 國際情勢와 그것이 東아시아에 미칠 影響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 글은 주로 韓·蘇關係에 대한 美國의 입장을 다루고 있으며, 討論을 위한 比較觀點에서 日本의 입장도 간단하게 취급하고 있다.

I. 韓·蘇關係의 政治的 涵의

一般的으로 국경을 통한 經濟的, 文化的 交流의 增加는 雙方 社會의 민감도를 부여하여 結果적으로 政府間의 關係를 變化시킨다고 지적되고 있다. 초국가적 機能主義者들에 따르면 非政府的 행위자들의 相互訪問은 國家社會 내에서의 變化를 유도할 수 있고, 그들은 國家政策에 대해 신중히 반대하거나 그것을 침해하기도 하며, 때때로 국경을 넘나드는 利益集團들의 복잡한 유대에 의해 초국가적 기관이 형성되기도 하고, 政府는 다른 國家의 政府에 대한 새로운 權力과 새로운 說得形態를 獲得한다.³⁾ 技術的, 經濟的 상호의존은 초국가적 交流를 통해 獲得될 수 있는 利益에 대한 國民들의 관심을 유도해내게 된다. 그러므로 만일 相互作用의 틀이 같은 성질의 것이라면 그 交流는 價値를 공유하도록 고무될 것이고, 초국가적 행위의 범주를 擴大하도록 促進시킬 것이다.⁴⁾

韓·蘇關係의 發展에 따라 韓國과 韓半島 周邊環境의 안정에 있어서 蘇聯의 役割에 대한 蘇聯 자신의 인식도 變化해오고 있다. 蘇聯의 지도자들은 두개 韓國의 統一과 韓半島 狀況의 안정에 關係 北韓이 提起한 提案·計劃들, 예컨대 駐韓美軍 撤收 등을 아직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蘇聯은 점차 韓國政府가 提起한 많은 提案들에도 익숙해지고 있는 중이다. 특히 北方政策의 시작을 알린 '7·7宣言'과 지난 1988년 UN에서 6個國

3) Robert Keohane and Joseph Nye, Transnational Relations and World Politic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0).

4) 社會主義國家와 韓國의 貿易關係가 갖는 涵의에 대한 상세한 分析은 앞으로 발간될 Dan Sanford, South Korea and the Socialist Countries: The Politics of Trade (New York: St. Martin's Press)를 參照.

會談을 提案했던 盧泰愚大統領의 연설은 蘇聯側에 의해 韓國이 北韓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려는 希望을 나타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蘇聯의 韓國問題 專門家들은 이 發言이 한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타협 공식을 찾고 종합하는 데 기초가 될 흥미있고 합리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한다.⁵⁾

더욱이 韓半島에 대한 蘇聯의 政策에 있어서 근본적인 變化를 의미하는 몇가지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소련의 어떤 단체들은 韓半島를 안정시키고, 北韓이 제시한 급진적인 統一案보다 점진적인 統一案을 지지하기 위한 多面的인 공식을 제안하기 시작했다. 최근 모스크바라디오放送의 한 성명은 소련이 완전한 자격을 갖춘 회원국으로서 南韓의 UN가입을 지지할 것이라는 점을 “보편성의 원칙에 따른 두개 韓國의 UN加入 구상은 점점 世界國家들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⁶⁾는 표현을 빌어 보도하였다.

韓國과 蘇聯의 국경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기능적 交流는 이미 蘇聯의 인식과 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유도해냈다. 인식과 정책에의 영향은 互惠의인 현상이고, 韓國과 기타 아시아·太平洋地域 국가들은 앞으로 미칠 중대한 영향을 회피할 수 없다. 최근의 한 輿論調査에 의하면, 韓國人들은 여전히 소련이나 중국보다 미국을 선호하지만 이전에는 도전할 수 없을 정도로 우호적인 위치를 차지했던 美國의 지위가 매우 침식되어 가고 있는

註5) A.V. Vorontsov, "New Soviet Policy in Asia and the Pacific and the Prospects of Soviet-South Korean Relations," (1989年 7月 25~27日, 서울에서 開催된 The World Conference of Korean Political Studies에서 發表된 論文) p.8.

註6) Korea Herald, October 25, 1989, p.1.

것으로 나타났다.⁷⁾ 소련은 한국을 비롯한 亞-太地域 국가들의 참여로 시베리아開發이 이 地域에서 새로운 형태의 經濟的, 科學的, 文化的, 生態學的, 그리고 그 이외의 接觸構造를 창출하리라는 점을 기대하고 있다. 결국 蘇聯은 점증하는 亞·太地域의 통합에 영향력을 增大시키기를 원하고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太平洋經濟協力’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이라는 西歐의 고무된 概念을 바탕으로 亞·太地域이 장기적인 觀點에서 美·日에 의해 좌우되는 첫째 經濟的인, 다음으로 政治·軍事的인 체계모니를 擴大할 수도 있다는 危險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다.

게다가 소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蘇聯共產黨 제 27 차 黨大會에서 고르바초프가 제안했던 포괄적 國際安全保障體制의 창설과정에 亞·太地域을 편입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포괄적 國際安全保障體制’는 핵·우주시대에 강제당한 상황을 적당히 고려하여 ‘새로운 사고’를 통해 完結된 안전보장 概念의 전개에 있어서 質적으로 새로운 段階이다.⁸⁾

蘇聯의 지도자들은 아시아에서의 안전보장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接近方式의 하나로서 아시아의 구조적인 問題解決을 위해 ‘전아시아會議’ (AN-Asian Forum)를 제안해왔다. 그들은 雙方間的 關係강화가 그러한 多面的인 협상을 수행하기 이전에 필요하다고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韓·蘇關係는 亞·太地域에서의 포괄적인 안전보장을 향한 제일보로서 간주될 수 있다.

7) Korea Journal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Vol. 29, No.9 (Sept. 1989), pp.48 ~ 54.

8) ‘포괄적 安全保障’의 概念은 經濟的, 政治的, 社會的, 生態學的, 인도적, 이데올로기적 側面 등을 包含한 총체적인 人類文明의 發展問題에 대한 복잡한 接近을 전제로 하고 있다. I.S. Korolyov, “The Problems of the Soviet Union’s Involvement in the World Economy and Economic Relations With Asian-Pacific Countries,” (韓國國際關係研究所 主催 第18次 國際會議(1989년 7월 4~6일)에서 發表된 論文) p.21.

II. 韓·蘇關係에 대한 美國의 視角

韓國에 대한 蘇聯政策의 핵심적 목표는 美國軍隊의 제거와 미·일과의 지역적 防衛協力에서 한국의 철수(또는 적어도 역할의 縮小)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美國에 의해 폭넓게 인식되고 있다.⁹⁾ 이러한 점에서 ‘蘇聯으로부터 나오는 變化하는, 그리고 보다 성숙한 政策’은 아·태지역에서 美國과 그 우방국간의 ‘蘇聯의 위협’에 대한 인식차이를 擴大시키고 있다. 새로운 蘇聯의 자세가 그 적인 美國과 아·태지역 政府들간의 유대를 약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¹⁰⁾ 전반적으로 東아시아 및 태평양지역에서 현재의 國際政治的 상황이 미국에 우호적이기 때문에, 韓國에 있어서의 蘇聯의 행동을 포함한, 이 지역에서 실행적인 관계를 설립하려는 蘇聯의 어떠한 시도도 美國의 입장에서는 現狀을 전복하려는 소련의 새로운 戰略으로 비추어질 수 있는 것이다.

소련의 행동에 대한 美國의 의심 속에서, 우리는 점증하는 關係를 모색하려는 韓國의 蘇聯에 대한 ‘北方政策’을 공식적으로 지지한다는 미국의 태도를 표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비록 美國이 평상적으로는 蘇聯에 대한 한국의 정책을 환영하고 그것을 결코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나 內面的으로는 미국에서 강력한 반대와 조심스러운 보류조치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美國이 우려하는 데에는 몇가지 이유가 背景으로 깔려 있다. 그 하나는

9) Herbert J. Ellison, The Soviet Union and Northeast Asia (Lanham, MD : Univ. Ess of America, 1989), p.46.

10) Ronald D. McLaurin and Chung-in Moon, The United States and the Defense of the Pacific (Seoul : Kyungnam University, 1989), p. 307.

社會主義國家를 다루는 韓國의 經驗不足이다. 미국은 사회주의국가들과 韓國의 관계를 여전히 불편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韓·蘇關係가 착오없이 그리고 주의깊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팔머 (Norman D. Palmer)는 미국의 우려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南韓은 아직도 共產主義國家와의 관계에서 신중하게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北方政策이 美·日과의 관계를 조금도 약화시키지 않도록 조심스러워야 한다. 분명히 이것은 미묘한 均衡的 行동을 요구할 것이며 南韓은 그러한 행동에서 아직도 잘 訓練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그들은 배우고 있다.”¹¹⁾

美國이 우려하는 또다른 이유는 COCOM會員國들이 동의한 규제하에서 금지된 技術的, 軍事的 장비를 양도할 可能性 때문인 것 같다. 미국은 이러한 우려가 1989년 5월 COCOM會員國이 아닌 韓國과의 영향으로 部分的으로는 완화되고 있다고 인정한다. 사실상 이 각서에서 韓國은 COCOM規制를 준수하는 데 동의했으며 만일 어떤 社會主義國家에게 하이테크產品을 제공할 것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美國과 協議를 거쳐야 한다는 의무를 받아들였다.¹²⁾

세번째 이유는 韓·美間의 軍事的 유대 및 그러한 관계의 결과물로서 산출되는 기타 유대관계들이 弱化될 것에 대한 美國의 두려움이다. 이는 東西데탕트가 특히 亞·太地域에서 美·蘇間의 대립적인 軍事構造를 완전하게 撤廢시키지 못했다는 사실에서 보다 說得力을 갖는다. 이러한 狀況으로

11) Norman D. Palmer, "South Korea's Nordpolitik," (1989년 11월 9~11일, 시애틀에서 開催된 The Annual Meeting of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West에서 發表된 論文) p.18.

12) Ibid., p.16.

볼 때, 美國은 蘇聯에 대한 韓國의 독자적인 접근에 어느정도의 선을 그으려고 努力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의 학자, 外交官, 저널리스트들의 말을 인용한, 韓國 주요 일간지에 게재된 한 論文은 韓國과 社會主義國家들과의 교류가 증가하면서 예견되는 蘇聯諜報機關의 한국침투를 미국은 두려워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¹³⁾ 특히 미국은 合作投資 같은 형태로 시베리아開發에 韓國政府가 참여하는 것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이는 蘇聯 동쪽의 전초기지를 요새화할 것으로 기대되며, 美國은 요새화된 전초기지가 亞·太地域에서 美·蘇間의 戰略的 균형을 변화시킬 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는 것이다.¹⁴⁾

韓國內에서는 미국이 소련에 대한 韓國政府의 정책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만일 한국이 현재의 狀態를 그대로 밀고 나갈 경우 미국이 韓·蘇關係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생각이 폭넓게 공유되고 있다. 美國行政府는 사회주의국가와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한국정부의 노력이, 한국이 극동에 대한 전략 및 데탕트의 흐름과 보조를 맞추어 나가는 한, 美國을 해롭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美國은 韓國政府가 소련과 交流를 가속화하고 있는 사실이 수용될 수 없는 면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美國이 前西獨首相 빌리 브란트의 '東方政策'을 다루었던 70년대 초반처럼 미국은 한국의 北方政策에 대해서도 '지지와 규제' (Support and Restraint)의 두갈래 정책을 使用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1990년 3월 13일 美國務部の 특별성명이 美國政府가

13) 「한국일보」, 1989년 3월 14일자.

14) 1988年 韓國은 美國에 대해 8億6千萬 달러의 貿易黑字를 記錄했다. 한편, 美國內에서는 시베리아開發에 參與하려는 韓國의 노력을 韓國이 美國으로부터 獲得한 貿易黑字를 蘇聯에 상당부분 양도할 것이라고 보는 이들도 있다. 「한겨레신문」, 1989년 2월 19일자.

韓·蘇間의 완전한 外交關係 樹立은 어떠한 조건없이 환영한다고 인정한 점은 흥미롭다. 특히 같은 성명에서 미국은 북한을 포함한 社會主義圈에 대한 韓國의 政策을 나타내는 단어인 ‘北方外交’라는 일반적 표현보다 ‘韓·蘇間의 外交關係’로 사용하였고 國務部는 한·소관계에 대한 미국의 인식에 관해 韓國側의 ‘오해’를 일소하려고 努力하였다.¹⁵⁾

성명이 발표된 시점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그것은 김영삼·박철언씨를 주축으로 한 韓國代表團의 蘇聯訪問이 있기 일주일전에 발표되었다. 이는 미국이 韓·蘇關係의 진전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關係進展의 결과에 대해 내키지않는 背書人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인 기여자로서 기능하리라는 사실을 意味하는 것이다. 韓·蘇間의 關係發展에 관한 이러한 種類의 미국 특별성명들은 한·소관계에 대한 강렬한 미국의 이해라는 側面에서 상당히 準備가 되어 있었음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성명들은 세계와 한반도 周邊狀況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評價로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¹⁶⁾

15) 「조선일보」, 1990년 3월 15일자.

16) 韓·蘇關係에 대한, 새롭게 명료된 美國의 자세는 조건없이 北方政策을 지지한 리차드 솔로몬의 發言과 맥락을 같이한다. “韓國 노태우대통령의 革新的 北方政策은 中國과의 經濟交流, 蘇聯 및 東유럽民主主義國家와 政治的, 經濟的 돌파구를 마련해냈다.”

“Sustaining the Pynamic Balance : An Overview of US Policy for East Asia and the Pacific,” (1990년 2월 22일 美國務部 東아시아·太平洋次官補 리차드 솔로몬의 성명), p.16.

Ⅲ. 韓半島周邊의 變化하는 國際環境

페레스트로이가는 蘇聯 國內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世界秩序에서의 革命的 變革을 의미한다. 그것은 민주주의에서 훈련된 인민들 자신의 선택과 함께 동유럽의 급진적 변혁을 허용하고 있다. 外交政策 部門의 페레스트로이카인 '새로운 思考'는 말 뿐만 아니라 행동에서 蘇聯外交政策의 실제적인 변화를 나타냈다. 유럽과 아시아에 있어서의 일방적 兵力減縮이 실행되었고, INF조약, 戰略的 軍備削減(START) 및 유럽에서의 재래식무기(CFE) 減縮協商 등에서 보여지듯이 급진적 兵力削減에 임하는 蘇聯의 자세는 진지하다. 蘇聯外交政策은 이데올로기적 대립과 冷戰下에서 수십년동안 지속된 전통적인 초강대국의 행태와 태도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를 시작했다.

전후시대를 개막할 때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美國은 새로운 國際政治 질서를 준비하고 있다. 워싱턴의 政策決定者들은 점차 현대세계에 있어서 혁명적 변화에 대한 적응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것은 고르바초프의 蘇聯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論爭이 해결된 레이건대통령 2次執權 후반기동안 수용되었다. 蘇聯의 改革이 심화됨에 따라 고르바초프와 軍備統制 및 地域的 협의를 진지하게 다루자는 제의는 실질적인 협상없이 蘇聯을 封鎖하고자 했던 사람들을 압도하게 되었다.

지난해 1월 부시의 집권 이후 여전히 政策決定者들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蘇聯과 빨리 상대하고 더욱이 고르바초프를 도우려고 한 반면 어떤 사람들은 보다 조심스럽게 행동하고자 한다. 동유럽에서 공산지배의 崩壞는 蘇聯의 政策과 行態變化의 결정적 증거를 제공하였다. 이는 어느 누구도 초강대국간의 競爭이라는 冷戰構造를 넘어 새로운 세계질서를 형성하는 蘇聯의 진의를 부정하지 못하게 하였다. 美國務部

長官 베이커에 따르면, 行政府는 고르바초프의 성공 그 자체가 美國의 근본적인 이익이며, 蘇聯經濟의 재건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결론지었다. 몰타頂上會談에서 부시와 고르바초프가 양국이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이라고 공언하는 과정에서 거의 동일한 언어를 사용한 점은 그다지 놀랄만한 것은 아니다.¹⁷⁾

고르바초프가 蘇聯에서 시작한 國內改革의 과정은 美國에 의해 “冷戰을 종식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열쇠”¹⁸⁾, 즉 蘇聯外交政策 변화의 근본적인 원천으로 간주되고 있다. 실제로 베레스프로이카와 함께 중요한 변화들이 蘇聯外交政策에서 또한 나타나고 있다. 蘇聯에서는 현대문명에 있어서 주요 이슈가 社會主義와 資本主義간의 競爭이 아닌 생존이며, 平和共存은 階級鬭爭의 연장이 아닌 타협을 의미한다고 주장되고 있다.¹⁹⁾

또한 근본적으로 새로운 관계는 오직 兩國 이해의 균형을 맞추는 견고한 틀내에서만 이룩될 수 있으며, 그러한 균형은 兩側에 모두 이익이 되는 상호 妥協과 合意를 요구한다는 주장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그러한 균형은 物質的, 政治的, 法的, 道德的, 心理學的 보장, 이해의 상호평가메커니즘 창출, 다방면에서의 協力·發展을 필요로 한다. 이런 식으로 雙方은 상대방의 합법적인 이해를 인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데탕트는 “美·蘇 相互安保體制를 향한 일보, 바꾸어 말하면 포괄적인 安全保障

17) Arnold L. Horelick, “U. S. - Soviet Relations: Threshold of A New Era,” Foreign Affairs, Vol. 69, No 1 (1989/90), pp. 51~58.

18) Michel Madelbaum, “Ending the Cold War,” Foreign Affairs (Spring 1989), p. 35.

19) Sergey M. Rogov, “Detente is not Enough,” Foreign Policy, No 74 (Spring, 1989), p. 90.

計劃의 완전한 일부”²⁰⁾로서 평가되고 있다.

‘새로운 사고’를 추진함에 있어서 蘇聯은 현재 亞·太地域에서 美國의 이해를 인식하는 방향으로 비교적 실질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고르바초프는 블라디보스톡宣言에서 美國이 의심할 여지없이 이 지역에서 중요한 정치·경제적 이해를 가진 太平洋國家라는 점과 이 지역의 안보 및 협력문제는 美國의 참여없이 어떠한 해결점도 도달할 수 없음을 시인하였다.

새로운 대당트의 도래와 더불어 두 초강대국은 동아시아에서 협력하여 지역갈등을 안정시키는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韓半島의 安定構圖 역시 최근 多角的 次元에서의 會談을 통해 兩國 官吏들이 공동으로 모색하고 있다.

실제로 19세기 말 이래 美國은 지배적인 太平洋勢力이었다. 장기간에 걸친 美國의 출현은 필리핀, 괌, 하와이를 포함한 태평양의 거의 모든 지역에 걸쳐 이룩되었다. 亞·太地域 經濟의 급속한 발전도 태평양만과 美國의 끊을 수 없는 연계를 더욱 가속화하였다. 실제로 1970년대 말 이래 아시아國家들과 美國과의 交易은 美·유럽간의 貿易額을 초과했다.

美國은 과거세대를 통해 아시아에서의 3大 主要 戰爭을 경험하면서 그들 자신의 안전과 복지를 태평양에서의 안정 혹은 평화에 의존하고 있고, 평화는 美國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다고 확신하고

20) Ibid., pp. 100 ~ 101.

미·소간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은 자주 지역상황에 투영되어 왔다. 여기에는 두가지 이유가 지적될 수 있는데, 하나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간의 경쟁이 제 3세계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이고, 다른 하나는 세계의 양극화라는 단순한 이유이다. 따라서 전체세계는 “세계주변에 산재한 각 갈등지역에서 미·소가 서로에게 반대하는 미·소의 체스판”으로 간주되고 있다. Ibid., p. 99.

있다. 그러므로 美國은 대규모 經濟的, 政治的, 안전보장 이해에 대한 어떠한 고려든지 美國의 福祉에 사활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점에서 “美國의 태평양진출에 의혹을 품는 사람들, 美國이 궁극적으로 북아메리카의 경제선으로 퇴각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美國과 美國民의 이해, 認識, 態度를 잘못 해석한 것이다. 美國은 태평양세력이며 그것은 분명하다”라고 주장되는 것이다.²¹⁾

일반적으로 말해서 反共同盟은 美國과 아시아國家들 사이의 政治的, 安保的 유대를 규정하는 기본적 특징이다. 그러나 최근 蘇聯이 東北아시아에서 그들의 향상된 軍事力을 日本이나 韓國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데 이용하거나 北韓으로 하여금 侵略的인 행동을 자극하는 데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은 명확하게 이해되고 있다. 또한 蘇聯外交政策에서 ‘새로운 思考’의 진행 이후 공산주의의 팽창은 아시아에서의 核心的인 政策問題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해지고 있다.

만일 아시아에서 새로운 蘇聯의 군사적 모험이 예견된다는 사실이 의심스러울 경우, 亞·太地域에서 美國에 대한 문제제기는 어떻게 오랜 관계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再定義되어야 하는가라는 점이다. 이는 美國이 이 지역의 모든 국가들에 대해 우선적인 관심을 쏟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분명해지는 동안 안보 및 방어이슈로부터 정책을 재정비함을 의미한다.²²⁾ 美國은 비록 美國의 참여가 蘇聯을 항복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21) Ronald D. McLaurin and Chung-in Moon, op. cit., p. 290.

22) Paul H. Kreisberg, “Containment’s Last Gasp,” Foreign Policy, No 75 (Summer 1989), p. 155.

솔로몬 차관보는 아시아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전략적 환경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1) 일본, 중국, 인도 등 새로운 중심세력의 등장 2) 전례없는 고도의 군사력을 획득하고 있는 小國들의 강력화 3) 아시아지역에 정치적, 경제적 접근을 가속화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군사적 출현을 조절하고 있는 소련의 움직임 등이다. “Sustaining the Dynamic Balance: An Overview of U.S. Policy for East Asia and the Pacific,” op. cit., p. 18.

가정이 올바르다고 할지라도 美國政策의 성공은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인정한다. 그리고 美國은 점진적으로 적절한 戰略을 세우는 과정에서 아시아에서 우방과의 보다 밀접한 협력과 새로운 해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亞·太地域의 긴장을 완화하고 이 목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정치적 대화에 기여하는 조치를 논의해야 할 시기이다.”²³⁾

최강의 太平洋勢力으로 남고자 했던 美國政策의 核心的 요소중의 하나는 韓國의 安保에 대한 美國의 위임이었다. 그러나 美國에서는 韓國에서의 不介入을 요구하는 새로운 목소리가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그들은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으로 협정을 위조한 후에 어떠한 侵略的 행동도 저지하려는 蘇聯, 中國과 함께 美國은 강력한 갈등을 고립시키기 위해 相互不干涉을 진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에 의하면, 美國의 不介入은 군사적 개입을 자동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고안된 닷을 분해하고, 美國軍隊의 유지 비용을 저축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담보할 수 있으며, 美國勢力의 可視的 상징물 대부분을 제거함으로써 “韓國政府의 失策을 美國의 책임으로 떠맡기려는 韓國民들의 경향”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또한 그 결과는 우방간에 발생하는 우연적인 긴장을 잘 해소할 수 있는 보다 안정된 관계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²⁴⁾

이러한 주장의 이면에는 여러 同盟파트너들이 同盟의 적절한 대응은 차치하고라도 ‘蘇聯의 위협’이라는 본질에 점차 동조할 수 없다는 인식이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주장에 따르면, 변화된 세계에 美國의 同盟關係를 적응시켜야 할 시기이다. 즉, 장기적인 목적은 美國이 지배하는 집단방

23) Kreisberg, *op. cit.*, p. 159.

24) Doug Bandow, “Leaving Korea,” *Foreign Policy*, No. 77, pp. 89 ~ 91.

어로부터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국가들이 지지하는 지역안전보장협정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체제가 다른 국가들의 문제에 대한 美國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한편, 美國으로 하여금 보다 적은 비용으로 보다 많은 보호를 제공할 것이라는 주장이다.²⁵⁾

韓半島를 둘러싼 현하의 국제정치환경 속에서 이 지역에 대한 美國의 정책을 바꾸려는 강한 압력이 있다. 美國防部 東아시아·太平洋 副次官補인 라이트(T. W. Wright)는 美國이 제기한 어떤 변화와 그것이 도출할 효과를 주의깊게 조사하려는 의도와 함께 방어관계 부문에서 지원하는 역할로부터 이동하기 시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²⁶⁾

韓半島는 자주 유럽스타일의 ‘信賴構築措置’가 긴장을 완화하고 나아가서는 軍備統制協定을 유도해 낼 수 있는 아시아의 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유럽의 데탕트가 소련과 서독간의 관계개선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점은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만하다. 1970년 8월 12일, 브란트와 코시긴은 모스크바에서 불가침조약을 체결하였고 그후 후속조치들이 뒤따랐다.²⁷⁾

키신저는 그의 회고록에서 브란트의 ‘東邦政策’이 닉슨과 자신으로 하여금 의구심을 자아냈고 걱정스럽게 했다고 밝혔다. 그들은 독일과 다른 유럽同盟들에 대한 蘇聯의 政策動機를 선택적 데탕트(selective detente)

25) Ibid., p. 92.

26) 1990년 2월 22일 미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 라이트의 성명, p. 11.

27) 1970년 1월 14일 브란트는 외교적 승인없이도 동독과 불가침조약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브란트와 동독총리 스토프가 같은해 3월 동독의 에르푸르트에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승인에 대한 동독의 자세는 완고했다. 결국 두개의 독일은 1972년말 상호승인을 부여하는 조약에 조인했다. William E. Griffith, The Ostpolitik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Cambridge, Mass : MIT Press, 1978)

의 실행, 즉 美國에 대해 비타협적 자세를 유지하는 한편 美國의 몇몇 同盟國들과 긴장을 완화하는 조치로 인식했다. 美國의 지도자들 역시 브란트의 東方政策을 “비스마르크로부터 라팔로에 이르기까지 동서간에 자유로이 연습하는 것은 독일전통적인 外交政策의 정수”²⁸⁾라고 표현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고전적 게르만민족주의로 파악했다.

이는 닉슨과 키신저가 美國을 배제하고 결국 西歐同盟을 와해시키는 것 으로부터 蘇聯과 西獨이 주도하는 유럽의 데탕트를 방해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소련과의 데탕트를 발전시키는 쪽으로 진행시켰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키신저 역시 소련대사 도브리닌이라는 자신의 비정규적인 경로를 통해 브란트의 東方政策을 구조했다고 주장한다. 美國의 움직임은 처음에는 의혹에 의해 동기가 발생되었으나 나중에는 브란트의 東方政策을 지원했던 것으로 보인다.²⁹⁾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 즉 조건과 행위자들은 같을 수 없으나 우리는 20년전 東邦政策에 대한 美國의 자세와 韓國의 ‘北方政策’의 일부분으로서 韓·蘇關係의 진전에 대한 美國의 자세 사이에 유사점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처음에 美國은 蘇聯의 동기와 韓國의 반응에 의구심을 가졌으나 점차 실제적, 평화적 공존이라는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는 데 함께 참여하는 자세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28) Henry Kissinger, White House Years (Boston: Little and Brown, 1979), pp. 409 ~ 412.

29) Ibid., p. 412.

IV. 韓·蘇關係에 대한 日本의 視角

일반적으로 蘇聯은 韓國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北方領土問題에 관한 日本의 완고한 자세를 경감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생각할지도 모른다고 간주되기도 한다. 日本은 北方領土가 반환되기 이전에는 소련의 어떠한 형태의 평화조약 체결도 거부하고 있다.

領土問題는 日·蘇 兩國民들간의 의혹의 상징이다.³⁰⁾ 새로운 내각이 형성된 이후 개최된 첫 記者懇談會에서 가이후 日本首相은 國際社會에서 최근 발생하는 구조적 變革에 힘입어 日·蘇關係 正常化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北方領土問題 해결과 平和條約 締結을 통한 급진적인 關係改善을 희망하였다.³¹⁾

兩國의 關係改善에는 거대한 潛在力이 있다. 蘇聯은 蘇·日間의 貿易量을 50억달러에서 500~600억 달러까지 증가시켜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1989년 말 소련에서 合作投資關係法이 시행된 이후 2년간 蘇聯에서 일본상사와 合作投資가 약 20여건 등록되었다. 그러나 日本의 企業들은 蘇聯과의 經濟協力에 대해 다소 소극적이고 관망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과거 수년간 日本은 시베리아개발을 蘇聯을 제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30) 보리스 옐친은 1990년 2월, 방일기간중 북방영토를 일본에 반환하기 위한, 5단계로 구성된 장기적 프로그램을 개인자격으로 제안했다. 이 프로그램에 의하면, 북방영토가 일본에 반환되는 데에는 15~2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옐친이 제기한 프로그램은 결국 일본의 관심을 끌지 못했고 어떤 사람들은 “부적절하게 급진적인” 것이라며 거부하였다.

31) 소련은 가이후의 발언을, 최초로 일본수상이 소·일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표현을 빌어 환영하고 있다. TASS, March 2, 1990: Moscow Radio, March 1 1990: FBIS/Soviet Union, March 7, 1990, p. 18.

용해 왔다. 만일 韓國이 이 사업에 참여했다면 日本과의 관계에서 蘇聯이 ‘韓國카드’를 이용한 가능성은 그만큼 커졌을 것이다. 따라서 日本은 韓·蘇關係 改善에 방관자로 남아 있지는 않을 것이며, 兩國에 대한 영향력을 제고함으로써 兩國을 제어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日本政府는 韓國의 ‘北方政策’에 대해 도울 것이라는 의지와 지지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日本이 北方政策을 환영하는 데에는 1) 東北亞의 緊張緩和 2) 4強國의 하나로서 한반도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의 獲得 3) 北韓과의 관계를 개선할 가능성 등과 같이 그것이 日本에 바람직한 결과를 유인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北方政策과는 별도로 韓·蘇關係의 발전은 주로 蘇聯의 韓國카드사용 가능성 때문에 日本人들에게 매우 민감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 같다.

地理적으로 日本은 亞·太地域에서 蘇聯과의 경제협력 뿐만 아니라 蘇聯 極東開發에 있어 蘇聯으로부터 호의를 받는 競爭相對가 될 韓國과 이웃해 있다. 이와 아울러 日本은 東아시아의 주요세력으로서 蘇聯과 競爭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요인들은 日本의 지위를 韓·蘇關係에 대한 美國의 그것과는 다른 것으로 만들고 있다.

V. 結 論

‘새로운 政治的 思考’ 하에서 고르바초프대통령은 유럽에서의 급진적 변혁을 시작, 허가하였다. 그는 또한 동아시아에서 冷戰의 얼음을 깨기 시작했다. 고르바초프는 蘇聯의 아시아지역에서 모든 중거리미사일을 폐기하는 데 동의했으며, 주로 中·蘇國境地域에 분포되어 있는 20만 병력의 일방적인 철수를 약속하였다. 또한 아프간으로부터 모든 병력을 철수시켰고 베트남군의 캄보디아철수를 지원하였다. 현재 그는 蘇聯의 太平洋艦隊와 베트남의 캄람만을 비롯, 國境밖에 배치되어 있는 아시아의 모든 軍兵力을 철수시키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이니셔티브에도 불구하고 美國은 마치 그들이 東아시아에는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처럼 행동할 수 없다.³²⁾

베이커 美國務長官은 새로운 ‘힘의 相關關係’에 의해 창출된 기회를 포착하는 것은 서방의 과제라고 인정했다. 그에 따르면, 蘇聯과 함께 “우리는 체계적인 협력을 促進할 새로운 매개수단을 설립하고 探究하고 있다”³⁴⁾고 밝혔다. 여기에서 그들이 체계적인 협력을 적용하려고 시도하는 지역은 韓半島인 것 같다.

韓·蘇關係에 대한 美國의 입장은 부시行政府의 蘇聯威脅과 世界 및 東아시아에서 발생한 변화의 중요성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기 이전까지 모

32) CIA의장 웹스터는 의회에서 고르바초프 이후의 후임자가 강경파라 하더라도, 군사력을 증강치 못하게 하고 미국에 대한 정책을 대립적으로 만들지 못하게 할 경제적, 정치적 압력하에 놓일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March 2, 1990, p. 1.

33) “The Thaw in Asia,” New York Times, editorial, March 28, 1990.

34) 미상원 외교위원회(1989년 6월 20일)에서의 베이커장관 보고: Department of State Bulletin(August 1989), pp. 61 ~ 62.

호한 것처럼 보였다. 비록 韓·蘇間의 우호적 관계가 이 지역의 緊張緩和에 도움이 되더라도 韓·蘇間의 非政治的 유대 이후에 예상되는 蘇聯의 政治的 영향력을 두려워 하고 있다. 분명히 美國은 고르바초프의 經濟協力에 대한 호소 등 蘇聯의 의도에 대해 韓國이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韓半島에서 蘇聯과의 體制的 協力を 적용시키려는 시도와 함께, 20년전 브란트의 '東方政策'에서처럼 美國의 모호한 태도와 강한 의구심은 점차 적극적 인식으로 대치되고 있다.

美國의 태도와는 달리 韓·蘇關係 발전에 대한 日本의 인식은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고 있다. 東아시아에서 美·蘇協力の 증대는 韓·蘇關係를 적극화시키지만, 개선된 日·蘇關係는 韓·蘇關係의 높은 민감도를 유도해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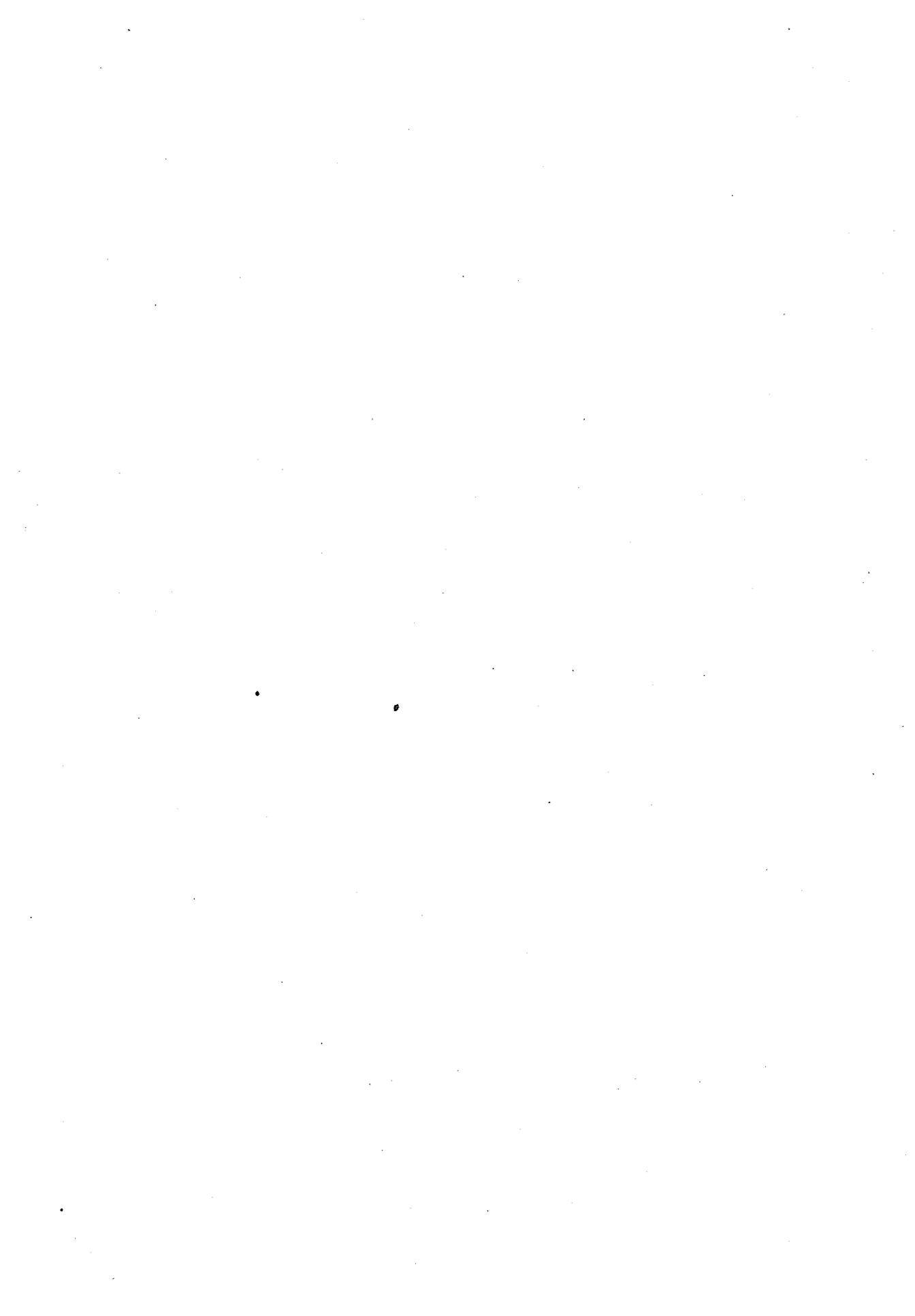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東아시아에서 새로운 국제관계의 필요성과 가능성은 美國指導者들에 의해 인식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東아시아에서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韓·蘇關係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東北亞 經濟圈斗 多者間 經濟協力

安 錫 教
(漢 陽 大)

目 次

I. 問題의 提起	97
II. 中國의 經濟圈 構想과 韓・中經濟關係	100
III. 東北亞經濟圈과 南北韓間의 經濟交流	107
IV. 結 論	116



I. 問題의 提起

근년에 나타나고 있는 國際政治的, 國際經濟的 일련의 변화들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우리가 일찌기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이다. 특히 1985년 3월 蘇聯共產黨書記長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등장한 이후 國際政治는 과거의 冷戰的 對決構造에서 和解의 構造로 전환되고 있다.

소련은 이른바 “新政治的 思考(New Political Thinking)” 또는 “새로운 데탕트(New Detente)”라는 政治哲學을 표방하고 이를 外交政策에 적용함으로써 美國과 중거리핵미사일의 폐기에 관한 INF 協約을 체결한 이후 재래식 무기의 감축, 단거리미사일 제거, 나토와 바르샤바의 해체 및 亞·太沿岸國平和會議 등을 제기하고 있다. 西歐 및 美國 역시 이에 대한 대응정책을 마련하는데 부심하고 있으며 韓國 역시 北方政策을 통해서 새로운 國際政治秩序의 태동과정에서 韓半島의 긴장완화를 위한 일련의 정책을 투입하고 있다.

國際經濟的 측면에서 볼 때 세계경제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의 특징을 노정하고 있다. 그 하나는 經濟의 블록化 추세이며 그 다른 하나는 亞·太地域의 경제적 영향과 비중이 강화되고 있는 현상이다. 歐州共同市場은 1992년까지 명실상부한 단일시장, 단일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미국과 카나다는 이미 自由貿易協定(Free Trade Agreement)을 체결한 바 있다. 소련은 1986년 고르바초프의 블라디보스토크 연설에서 아시아국가임을 선언한 이후 지난 88년에는 크라스노야르스크 연설에서 亞·太國家들과의 經濟協力意思를 재천명하고 나섰다. 대외정책에 있어서 이른바 “새로운 政治的 思考”내지는 “脫理念化”를 출발배경으로 하는 소련의 亞·太地域에 대한 경제적 진출의사는 이른바 “經濟的 安保(EC-

onomic Security) ”의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東亞 細亞國家들은 한편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効率的인 經濟發展을 示顯해 왔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美·日의 域內영향력에 강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련은 極東地域의 창문을 개방하여 亞·太地域의 經濟列車에 동승하여 동태적 발전의 氣를 흡입하는 일방 美·日의 경제적 영향력에 대한 대항세력으로의 부상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소련의 움직임은 다시 美國의 反作用을 불러 일으키기 마련이며 최근 미국은 亞·太協力機構에 관한 여러가지의 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제안 역시 소련과는 약간의 時差가 있기는 하나 “經濟的 安保”의 개념을 採用하고 있는 것은 흥미롭다.

2000 년대의 새로운 域內分業秩序가 태동하려는 와중에서 中國 역시 다양한 형태의 經濟的 協力方案을 구상하고 있다. 아직 중앙정부의 정식안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고 유관연구소 내지는 학자들에 의하여 구상되고 있는 단계에 있기는 하나 中國側은 여러가지의 대안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中華經濟圈, 黃海經濟圈, 中南經濟圈 그리고 東北亞經濟協力圈 등에 관한 구상들이 그것이다. 中國은 근년에 들어서면서 吉林省의 長春에 「東北亞研究中心」을 설립하여 여러 유관연구소 및 교수들을 참여시켜 東北亞의 經濟協力에 관한 연구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이와같은 중국의 지역 경제권구상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경제전략적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것은 1987년 말 이후 제기되어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沿海地區 經濟發展戰略 내지는 이른바 國際大循環論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東北亞情勢의 변화는 韓半島에도 그에 상응하는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아직 이렇다 할 改革·開放의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는 北韓에 대하여 韓國은 근년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정치적, 문화적, 경

제적 교류를 제기하여 왔다. 대북한관계에 있어서 機能的 접근을 통하여 “신뢰를 구축하고 民族의 同質性を 회복하자”는 것이다.

南・北韓 經濟交流의 가능성은 크게 나누어 다음과 같은 두가지의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 하나는 第3國에서 多者間經濟協力の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형태이며, 그 다른 하나는 당사자간의 직접교류가 있을 수 있다.

II. 中國의 經濟圈 構想과 韓-中經濟關係

이상에서 다루어 본 제반 요인들을 고려할 때 中國이 國際大循環論을 배경으로 하여 동북아경제권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韓-中經濟關係라 할 수 있다. 일본과 비교하면 일천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韓-中교역은 그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기록해 왔다.

〈表 1〉 韓國의 社會主義國家들과의 交易 (단위 : 백만 U.S 달러)

地 域		年 度			
		'85	'86	'87	'88
全 體	總 計	1,438	1,609 (11.9)	2,027 (26.0)	3,650 (80.1)
	輸 出	850	900 (5.9)	982 (9.1)	1,996 (103.3)
	輸 入	588	709 (20.6)	1,045 (47.4)	1,654 (58.3)
中 國	總 計	1,161	1,336 (15.1)	1,679 (25.7)	3,196 (90.4)
	輸 出	683	715 (4.9)	81.3 (13.7)	1,809 (122.5)
	輸 入	478	621 (29.9)	866 (39.5)	1,387 (60.2)
蘇 聯	總 計	102	133 (30.4)	200 (50.4)	278 (39.0)
	輸 出	60	65 (8.3)	67 (3.1)	100 (49.3)
	輸 入	42	68 (61.9)	133 (95.6)	178 (33.8)
東 歐	總 計	175	140	148	176
	輸 出	107	(△ 20.0)	(5.7)	(18.9)
	輸 入	68	20 (△ 70.6)	46 (130)	89 (93.5)

- * 괄호안의 숫자는 前年對比 增加率임.
- * 輸出은 KOTRA, 輸入은 관세청자료임.

〈表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8年末 현재 兩國間의 貿易額은 36억 달러로 이는 한국의 對社會主義貿易의 80%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또한 年度別 무역의 신장추세에 있어서도 한국의 전체적인 무역상승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直接投資는 아직 크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조건이 충족된다면 이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東北亞經濟協力の 틀속에서 韓-中關係를 고찰함에 있어 우리는 이를 지역적으로 세분화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廣東省을 중심으로 하는 남지나해와 上海를 중심으로 하는 東지나해 및 大連을 중심으로 하는 黃海 연안지역이다. 第1의 경우가 중국을 중심으로 대만, 홍콩, 마카오를 포함하는 “中國經濟圈” 그리고 第2, 第3의 경우가 東北亞經濟의 전략적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中國經濟圈에 관한 중국의 구상은 1989年 4月 10日字 “經濟導報”에 中國社會科學院의 周志壞연구원이 “中國經濟圈初探”題下의 글을 게재한 이후 그 대체적인 내용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다. 참고삼아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大陸, 대만, 홍콩·마카오 3地區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相互補完性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대만과 홍콩은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보임으로써 그 결과 홍콩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중심의 하나로 부상하였으며 무역, 해운, 관광, 정보 등 각 분야에서 그 역할이 크게 제고되고 있다. 대만은 농·공업 균형발전과 대외무역을 통하여 1인당 GNP는 5,000 달러, 대외무역규모는 세계 14위로 부상하였다.
- 그러나 앞으로의 발전에 있어서 이들 국가들은 상당한 난관에 직면

할 것으로 보인다. 대만과 홍콩은 輸出主導型 성장방식을 추구해 왔으나 1989년 이들 국가의 최대수출시장인 미국이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에 대하여 일반 특혜관세제도를 폐지하고 신보호주의 압력을 가함에 따라 지속적인 미국시장의 개척이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시장다변화가 중요하나 이 역시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 이들 국가에서는 또한 노동력이 부족하고 賃金上昇에 따른 生産費의 압력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노동집약적 산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대만은 또한 장기간의 貿易黑字로 700억 달러 상당의 外貨를 보유하고 있어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문제해결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 이에 비하여 “大陸”은 78년 이후 改革·開放으로 연평균 9.3%의 경제성장을 실현하기는 하였으나 지역이 넓고 인구가 많으며 자금이 부족한데다 경영관리수준이 낙후된 상태며 교통, 운수, 통신 등 社會間接資本이 취약하다.

이상과 같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3개 지역의 보완적 요소들, 즉 중국대륙의 토지, 노동력, 광대한 잠재시장과 대만의 기술, 경영「노우-하우」, 국제판매능력 및 홍콩의 무역·금융서비스능력 등이 결합되면 이들 지역은 장차 “大中國社會”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국가간의 경제교류상황을 보면 홍콩은 중국의 주요수출, 중개수출시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외화획득원이 되어 있으며, 중국은 홍콩의 第一輸入市場이다. 대만은 홍콩의 제 4 무역대상국이며, 홍콩은 대만의 제 3 무역대상국이다. 1988년 두 나라 간의 무역액은 450억 홍콩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과 대만간에는 88년 15억 달러의 間接交易이 이루어졌으며 직접무역도 개시되고 있다.

중국과 홍콩 간의 무역은 1978~1989년 사이 17.9배가 증가하였으며

合作領域도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외국자본에 의한 투자액중 60%가 홍콩에 의한 것이며, 중국 역시 홍콩의 공업생산, 금융, 유통부문에 광범위하게 진출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중국과 대만의 경제교류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두나라간의 교역은 아직 홍콩을 통한 간접무역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교역구조는 단순한 소비재에서 생산재로 전환되고 있으며, 역시 규모는 크지 않으나 대만자본의 對中國投資도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이상과 같은 중국경제권의 구상은 國際大循環論을 배경으로 한 경제발전의 동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다분히 政治的 目的을 갖고 있는 것은 자명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홍콩과 마카오는 각각 1997, 1999년에 중국으로 반환될 예정이며, 中國側은 소위 “1國2體制”論을 토대로 대만의 統一을 부단히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고려할 때 이들 지역간의 經濟的 統合은 政治的 統一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 분명하다.

이상에서 우리는 중국이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國際大循環論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廣東省을 중심으로 하는 남지나해에서의 경제통합에 관하여 개관해 보았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지나해와 황해 내지는 東北3省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의 경제권구상이다. 이른바 東北亞經濟圈의 배경과 구상내용에 관해서는 중국의 연안개발·개방전략을 한국과의 관계라는 맥락에서 개관해 보기로 한다.

上海를 중심으로 하는 山東의 연안지역 개방을 통한 國際大循環戰略과 韓國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국가들과의 경제적 연계관계에 관해서는 黃大明 등 8명의 상해지역 경제학자들이 87년 말 中國社會科學院이 발행하는 논문집 「社會科學」에 “아시아·태평양 경제상황과 上海經濟發展”題下の 글을 발표하면서 구체화되었다. 이 논문은 물론 동아시아 경제발전의

중심지로서 上海의 역할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있기는 하나 그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이론에 의하면 중국의 對外開放은 3 단계로 진행되고 있는데 제 1 단계는 4개 經濟特區에 의한 “先寧”戰略이며 제 2 단계는 海南島와 14개 연안도시의 개방인 “鋒線”戰略이고, 제 3 단계는 上海가 대외개방과 대내연합이라는 양면을 종합하여 전국최대의 경제중심으로서 4개 현대화 건설의 “開路先鋒”이 되는 “中鋒”전략이다. 최초의 새로운 세계적 기술혁명, 서방국가들의 고도성장 및 중국의 경제와 대외무역의 중심이 되고 있는 환태평양 지역을 잘 이용하면, 중국의 연안경제지역에 상해를 중심으로 하고 大連과 廣州를 남북의 양날개로 하는 고도경제성장대를 형성하여 중국의 경제도약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對中經濟政策에 있어서, 미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투자보다는 무역을 중시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도 주로 大連을 중시하고 있다. 이들 학자의 견해에 의하면 미국은 한국과 대만을 중시하여 이들 양국에 활발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전략적 의도는 이들 두나라와 일본과의 경제관계를 수직분업에서 수평분업으로 전환시켜 일본의 경제적 영향력이 증가하는 것은 견제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은 외국의 對中國 투자에 있어서, 홍콩을 제외하면, 수위를 접하고 있다. 또한 일본이 上海를 중요시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상해와 홍콩을 주요 공격거점으로 하고 황해와 남지나해의 진출로서 對中日政策의 골간을 형성하고 있다.

한편 소련은 제 2차 시베리아 철도의 조기 준공,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의 제 3기 확장공사 및 일본등과의 資本・技術協力을 바탕으로 시베리아와 극동에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國民經濟體系를 건설하여 소련경제의 중심을 東方으로 이전시키기 위한 계기로 삼고자 한다.

이상의 상황으로 미루어 90년대에는

- ① 中國의 동부 연안개방지역에 上海를 축으로 하는 별도의 고도 경제 발전 지역,
- ② 남으로 홍콩, 북으로 블라디보스토크 그리고 上海, 大連, 釜山, 東京을 축으로 하는 또 하나의 고도 경제발전지역,
- ③ 大連과 블라디보스토크를 東西로 하고 東京과 釜山을 중심으로 하는 고도 경제발전지역 등 3개의 經濟發全帶가 출현할 수 있다.

이상의 몇가지 經協可能性 중에서 제2와 제3의 구상은 東北亞經濟協力에 있어서 韓國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들어서면서 중국은 大連을 開放區로 하여 제2의 홍콩으로 발전시킬 장기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중국이 國際大循環論에 입각한 東北亞經濟圈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韓-中經濟關係를 중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反證하고 있다. 지정학적으로 볼 때 大連은 黃海를 사이에 두고 韓國의 西海岸과 마주하고 있으며 동시에 東北3省의 海洋進出에 대한 중요한 관문의 하나가 되고 있다. 또한 동북3성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소련 극동지역의 개발거점과 연결되어 있으며 北韓과 이웃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이 大連에 대하여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 중국시장 개척이 교두보로 활용하고 있는 것 역시 우연이 아닐 것이다. 여러가지 이유에서 南北韓間의 경제적 직접교류가 당분간 어려운 상황에서 東北3省地域에서의 南北韓-中國간의 三者 經濟合作 역시 새로운 대안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中國 開放型 開發戰略의 이론적 배경이 되고 있는 國際大循環論은 연안지역의 개발·개방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韓國의 對中進出 뿐만 아니라 對北韓, 對蘇聯 經濟協力を 유기적으로 연계시킨다는 시각에서 볼 때

中國의 東北 3省과 특히 遼東半島의 大連 그리고 山東은 전략적 거점으로
써 재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Ⅲ. 東北亞經濟圈과 南北韓間의 經濟交流

이상에서 우리는 亞·太地域에 대한 蘇聯의 經濟的 進出戰略과 南·北韓間의 對蘇經濟協力の 가능성을 점검해 보고, 日本, 특히 中國의 東北亞細亞 經濟協力에 관한 여러 구상들을 자세하게 다루어 보았다. 이러한 구상들은 그 내용이 어떠한건 相關국가들의 經濟的 開放政策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물론 北韓이 여타 社會主義國家들과는 달리 改革·開放을 유보하는 한 域內交易에 대한 北韓의 참여가능성은 일정한 한계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中國과 蘇聯이 社會主義經濟圈에 속해 있으며 이들 두 국가가 경제개발을 촉진시키는 지역들의 韓半島와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北韓의 참여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對北韓關係를 개선시키기 위하여 이른바 機能的 接近方法을 취하고 있는 韓國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러한 “多者間 經濟交流”은 남·북한 직접경제교류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점을 배경으로 하여 주로 中國의 東北3省地域을 연결고리로 하는 3개 相關국간의 경제교류 가능성과 방안을 개관해 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北韓의 교역이 갖는 특징을 간단히 언급하기로 한다.

북한경제는 통상 閉鎖的인 것으로 간주되지만 실제로 國民經濟의 海外依存度를 살펴보면, 최소한 여타 社會주의 국가들과 비교할 때,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니다.

<表2>에서 보는바와 같이 물론 韓國의 경우와 비교하면 北韓經濟의 무역의존도 내지는 해외개방도는 현저하게 낮은 것이 사실이다. 1986년 현재 무역의존도는 韓國의 경우 69.8%, 북한은 20.7%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중국이나 유고, 폴란드 및 헝가리 보다는 약간 낮으나 불가리아,

루마니아, 알바니아 등 보다는 북한의 경제적 개방도가 높은 것이다. 북한의 교역액은 1985년의 26억 달러에서 1986년에는 30억 달러로 15.5%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日本의 대외무역관계기관에서 파악한 이 자

〈表 2〉 南・北韓의 貿易依存度 單位：%

구 분	1977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남 한	56.8	66.0	71.4	66.5	66.6	72.5	73.3	69.8
북 한	17.7	25.2	20.8	23.7	19.6	18.6	-	20.7

資料：이대옥, “북한은 바뀌고 있는가? : 經濟”, 서울대학교 韓國政治經濟研究所, 1989.

료에는 東獨, 아프리카, 中東과의 무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교역규모는 이 수치보다는 높은 것이 확실하다. 〈表 3〉과 〈表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北韓의 무역에서는 蘇聯과 中國이 주종을 차지하고 있다. 北韓 總輸出에서 蘇聯과 中國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51.4%, 22.0%로 73%를 점하고 있으며, 總輸入에서는 60.5%, 13.5%를 차지하여 74%를 점유하고 있다.

한편 非共產圈國家들 중에서는 日本과 西獨이 北韓의 주요 수출시장이 되고 있으며, 수입에 있어서는 日本과 홍콩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있다. 北韓의 貿易收支赤字는 1985년의 4억 6천만 달러에서 1986년에는 5억 3천 1백만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赤字의 대부분은 蘇聯과의 무역에서 발생한 것이다. 對蘇貿易에서 발생한 북한의 적자는 1985년 3억 달러에서 1986년에는 4억 3천 7백만 달러로 무역적자의 대부분이 소련과의 교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소련이외에 북한의 무역적자가 크게 나타

〈表3〉 北韓의 國家別 輸出構造(%, 1985)

國	家	比	重	(%)		
蘇	聯			51.4		
中	國			22.0		
日	本			13.2		
西	獨			4.8		
餘	他	共	產	國	家	3.7
喜				1.9		
喜				1.9		
總	計	(餘他地域	包含)		100.0	

資料：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China, North Korea",
Country Report, No.3, 1988.9.3.

〈表4〉 北韓의 國家別 輸入構造(%, 1986)

國	家	比	重	(%)		
蘇	聯			60.5		
中	國			13.5		
日	本			10.8		
喜				4.4		
喜				4.4		
西	獨			2.5		
餘	他	共	產	國	家	2.3
總	計	(餘他地域	包含)		100.0	

資料：上掲書

난 국가는 日本이다. 그러나 對日貿易에서 발생한 직자규모는 소련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이며 그 규모 역시 1985년의 8천9백만 달러에서 1986년에는 2천9백만 달러로 크게 감소하였다. 北韓의 國家別 貿易에서 나타난 貿易收支의 변화는 <表5>에 표시된 바와 같다.

소련은 과거 북한으로부터 鑛物과 金屬製品을 수입했으나 근년에는 生必需品, 機械類, 壓延金屬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특히 괄목할 만한 사실은 北韓이 소련의 원료를 사용하여 연간 5천만점 이상의 다양한 縫製品을 소련에 공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북한은 電力, 鐵金屬, 機械製作 분야에서 소련으로부터 70개소 이상의 설비를 제공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電力 生産施設의 60% 이상, 石油加工施設의 50%, 化學肥料 生産施設의 약 14%가 蘇聯의 技術協力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외에도 序頭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은 소련의 極東地域開發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北韓의 참여하에 多者間의 經濟交流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은 中國東北部에 위치하고 있는 黑龍江, 吉林 및 遼寧등 3개 省이다. 특히 黑龍江을 사이에 두고 소련과 마주하고 있는 黑河市는 건너편 블라고베시첸스크市와 國境貿易을 추진하는 최고의 거점이다. 중국은 최근 하얼빈으로부터 黑河를 연결하는 철도를 신설, 소련의 시베리아 橫斷鐵道와 접속시켰다. 이 철도는 중국의 제7차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약 3년간의 공사끝에 마무리된 것이다. 黑河는 이제 중국과 소련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陸上交通의 요충지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역은 주로 바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규모를 확대시키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黑龍江省 당국은 이같은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중인데 제3국인 韓國이나 日本

〈表 5〉 北韓의 國家別 貿易規模와 貿易收支 (단위 : 백만달러)

	輸 出			輸 入			貿易收支	
	1985	1986	變化率(%)	1985	1986	變化率(%)	1985	1986
日 本	170.3	164.3	-3.4	259.42	193.16	-25.5	-89.10	-28.60
유 럽	61.75	72.31	17.1	62.06	79.56	28.2	-0.31	-7.24
이 중 :								
西 獨	52.51	59.76	13.8	28.08	44.67	59.1	24.43	15.09
아 시 아	42.62	46.11	8.1	103.55	124.02	19.8	-60.93	-77.91
이 중 :								
홍 콩	21.16	23.50	11.1	53.05	78.47	47.9	-31.89	-54.97
싱 가 폴	6.63	8.43	27.2	24.81	27.41	10.5	-18.18	-18.98
타일란드	10.83	7.59	-29.9	9.32	13.57	45.6	1.51	-5.98
社 會 主 義 國	805.84	963.37	19.5	1,082.18	1,356.57	25.4	-276.34	-393.20
이 중 :								
蘇 聯	485.12	642.02	32.3	785.50	1,078.63	37.3	-300.38	-436.61
中 國	242.00	274.73	6.9	231.00	239.54	3.5	11.00	35.19
總 計	1,081.82	1,249.75	15.5	1,541.99	1,781.09	15.6	-460.17	-531.34

또는 東유럽을 포함한 다각적인 貿易시스템의 도입이 그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북한을 여기에 참여시키는 방안 역시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중국의 개방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大連港이 위치하고 있는 遼

東반도이다. 北京의 발표에 의하면 大連 근교의 大弧山반도를 기계공업·하
이테크산업을 유치, 科學技術情報센터의 기능을 갖춘 綜合輸出市場으로 육성,
새로운 자유항구로 만들 계획이다. 大連·大弧山의 자유항을 東北地域의 3
개省과 內蒙古 동부를 연결하는 「제 2의 홍콩」으로 만든다는 계획이 그
것이다.

大連市는 면적 64 *km*²의 大弧山半島를 金融, 製造加工工業, 貿易分野를 망라
한 大型 自由港으로 개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開發計劃은 현재
中央에 제출되어 審査·批准을 기다리고 있는데, 자유항의 정식명칭은 大弧
山半島 經濟特區 自由港으로 하고 기존의 大連經濟技術開發區도 여기에 포
함시켜 장차는 「제 2의 홍콩」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한다. 中國當局 關係
者에 의하면 앞으로 5년내에 開發區면적을 10여 *km*² 더 확장해서 그중 3
*km*²는 다양한 공업기지로 사용하고 5 *km*²는 外商에게 임대하며 나머지는 石
油化學工業區 건설에 사용할 것이라는데, 금세기 말까지는 경제특구를 조성
하여 선진기술형 외자기업을 유치할 예정이다. 또한 區內에는 과학연구기관,
情報센터 및 輸入商品市場을 설치할 것이라고 한다. 이 자유항은 東北3省
및 內蒙古 自治區의 동쪽 창구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궁극적으로는 大弧山半島經濟特區 속에 포함될 기존의 大連經濟技術
開發區에는 현재 160여개의 合資, 合作 등 외자기업이 사업을 추진중이고
總投資契約額은 4억 3천만 달러에 이르고 있는데 그중 60%가 外資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러한 遼東半島의 開發·開放計劃을 고려할 때 경공업과 機械, 化學, 電
子部門에서 南北韓과 中國간의 합작교류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大連은 중요
한 거점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中國, 蘇聯 및 南·北韓 간의 多者間 經濟交流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또

한 다음과 같은 중국의 개발계획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中國은 두만강 하구의 琿春市를 經濟特區로 개발할 계획을 추진중이다. 홍콩의 大公報에 의하면 琿春市는 장차 동북아시아의 경제력을 흡수하여 이 지역의 貿易·輸出加工中心地로 발전시킬 것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은 중국정부의 계획은 최근 소련이 韓國, 臺灣, 日本등 태평양국가들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나훗카 및 블라디보스톡을 경제특구로 지정할 것에 자극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지리적으로 琿春市는 中國, 北韓, 蘇聯과의 국경지대이면서 동시에 延邊朝鮮族 自治州內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南·北韓을 포함한 다자간의 경제 교류를 활성화시키는데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韓國企業의 입장에서는 연변 조선족 근로자들의 勞動生産性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收益性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琿春이 위치하고 있는 吉林省은 黑龍江省과 마찬가지로 蘇聯과 활발한 貿易關係를 맺고 있다. 吉林省 政府의 통계에 의하면 1988년 吉林省의 對蘇貿易은 1천 2백만 스위스프랑에서 '89년 상반기에는 3천 6백만 프랑으로 급신장하였다. 吉林省의 東端인 琿春縣은 蘇聯의 沿海地域과 접해 있으며 접경선은 232.7 km에 이른다. 현재 雙方間의 交易은 주로 바터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吉林省은 소련측에 옥수수, 땅콩, 과일, 통조림, 의류, 신발, 복사기, 계산기 등을 수출하고 소련으로부터는 목재, 철동재, 시멘트, 화학비료, 피아노, 냉장고 등을 수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雙方交易의 中·長期的 확대가능성은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호보완적인 상품이 제한되어 있는데다 교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수송망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있

음에도 불구하고 黑龍江省과 吉林省은 南·北韓 - 中·蘇 간의 4角貿易關係를 연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 언급한 방안이외에도 이들 국가들은 輕工業 및 知識集約的產業에서 상호협력이 가능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瀋陽과 天津의 立地나 開發計劃의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최근에 瀋陽市는 國家科學技術委員會의 최종승인을 거쳐 하이테크 產業開發計劃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우선 中央政府가 심양시에 건설하는 로보트 파이럿트 프로젝트, 대규모집적회로(LSI)기술개발센터, 감광재료기술개발 및 감응기(Sensor)용 전자기술개발센터 등 5개 기술개발기지를 건설하여 매년 規模經濟를 위한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시장성이 높은 尖端製品을 1~2개 품목씩을 생산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瀋陽市 科學技術委員會의 計劃에 의하면 瀋陽市는 1995년까지 50개 품목의 尖端產業製品을 개발할 계획이며 이 제품의 생산액은 약 20億元으로 예정되어 있다. 개발예정인 제품은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와 컴퓨터, 메카트로닉스, 정보기술과 동제품, 정제약품, 신소재, 레이저광선 등으로 되어 있다.

또한 輕工業, 특히 紡織產業이 주력산업을 이루고 있는 天津市에 최근 自動車, 電子 및 海洋石油化學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어 產業構造가 지속적으로 근대화되고 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이들 새로운 3大基幹產業의 年間生産量은 天津市 工業生産總額의 20%를 점하고 있으며, 금세기 말에는 35%에 달할 전망이다. 80년대 초부터 시작된 自動車工業은 최근 수년간 외국으로부터 선진기술과 설비를 도입, 현재 승용차와 경자동차를 중심으로 83개사에서 연간 45,000(15억 7천만元)대를 생산하고 있다. 자동차공업의 발전과 함께 機械加工, 電子機械部品, 플라스틱 등 業種이 발전되고 있

다. 專門家들에 의하면 제 8 차 5 개년 계획기간 (1991 ~ 1995) 중 전자산업의 생산액은 경공업생산액을 상회하여 天津市 최대의 산업으로 성장하여 天津市는 경공업과 중공업의 綜合工業都市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IV. 結 論

근년에 들어서면서 국내적으로는 민주화의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새로운 테탕트의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冷戰的인 力學關係가 「革命的인 變化」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韓國 역시 최근에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 및 통일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정책의 주요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諸領域에 걸쳐 機能的 接近을 통한 同質化를 도모하는 것이다. 여기에 南·北韓간의 經濟交流를 활성화시키는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두가지의 방안이 있을 것이다. 그 하나는 두나라가 경제적인 直接交流를 통하여 貿易, 直接投資 및 資本과 技術去來를 추진하는 방안이며, 그 다른 하나는 주로 蘇聯과 中國에서 해당국가와 南北韓이 참여하는 多者間經協方案이다. 筆者의 판단으로는 현 단계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前者보다는 後者が 상대적으로 그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한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우리는 蘇聯의 遼東地域과 시베리아 그리고 中國의 東北3省과 遼東半島의 地政學的 의미에 보다 높은 관심과 연구를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